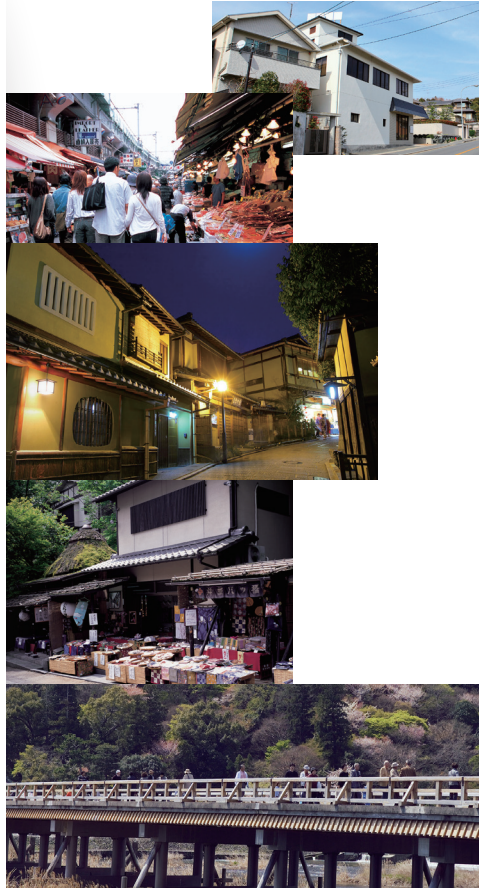


#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기획·진행

제5차국토종합계획 연구단

KRIHS



국토연구원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통합전략 2017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 I. 기본 방향

1.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 216
2.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 218
3.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확립 ... 219
  - (1) 일자리 창생 ... 220
  - (2) 사람 창생 ... 220
  - (3) 마을 창생 ... 220
4.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의 수립과 개정 ... 221

### II. 정책 기획·실행의 기본 방침

1. 기존 정책에 대한 검증 ... 229
  - (1) 부처별·제도별 ‘칸막이(縱割)’ 구조 ... 229
  - (2)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획일적 수법 ... 229
  - (3) 효과 검증을 동반하지 않은 ‘나눠 먹기’ ... 229
  - (4) 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인 시책 ... 230
  - (5)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 230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 230
  - (1) 자립성 ... 230
  - (2) 장래성 ... 231
  - (3) 지역성 ... 231
  - (4) 직접성 ... 231
  - (5) 결과 중시 ... 231
3. 국가와 지방의 대응 체제와 PDCA 정비 ... 232
  - (1) 데이터에 기초한 국가의 「총합전략」과 「지방관 총합전략」 ... 232
  - (2) 산·관·학·금·노·연·사 간 연계 추진 ... 233
  - (3) 정책 간 연계 추진 ... 233
  - (4) 지역 간 연계 추진 ... 234

### III. 향후 시책 방향

#### 1. 정책의 기본 목표 ... 235

- (1) 성과(outcome) 중심 목표 설정 ... 235
- (2) 네 가지 기본목표 ... 236

#### 2.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 ... 239

- (1) 로컬 아메노믹스의 추진 강화 ... 239
- (2) 새로운 '프레임', '담당 주체', '권역' 만들기 ... 241

#### 3. 정책 패키지 ... 243

- (1)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일자리 창출 ... 244
  - (가) 생산성 높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시책 ... 244
    - A 지역 기술의 국제화(로컬 이노베이션) ... 244
    - B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로컬 브랜딩) ... 246
    - C 지역 일자리 고도화(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 248
    - D 지역기업의 경영체제 개선과 인재 확보 등 ... 250
    - E 지역 전체의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 ... 254
    - F ICT 등의 이·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254
    - G 지역의 총력을 기울인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시책 ... 257
    - H 종합적인 지원체제 개선 ... 260
  - (나) 관광업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연계체제 구축 ... 261
  - (다)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265
  - (라) 지방으로의 인재 환류, 지방에서의 인재 육성, 지방의 고용 시책 ... 269
- (2)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 272
  - (가)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272
    - (나)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 274
    - (다) 지방에서의 청년 학업·취업 촉진 ... 276
    - (라)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282
    - (마) 지방 이주 추진 ... 283
- (3)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 288
  - (가) 저출산 시책의 '지역 어프로치' 추진 ... 288
    - (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 ... 289
    - (다) 출산·육아 지원 ... 290
    - (라) 지역 실정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 293



- (4)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 297
  - (가) 마을 만들기·지역 연계 ... 297
    - A. 마을 만들기에서의 지역 연계 추진 ... 297
    - B.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추진 ... 299
    - C.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간 연계 ... 300
    - D.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 ... 303
    - E. 마을 만들기에서의 관·민 연계 및 ‘시각화(visualization)’ 추진 ... 305
    - F.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시설의 매니지먼트 강화 ... 306
  - (나)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 ... 308
  - (다) 도교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복지문제와 저출산 문제 대응 ... 312
  - (라) 주민이 지역 방재의 담당 주체가 되는 환경 확보 ... 314
  - (마) 고향 만들기 추진 ... 314
  - (바) 건강수명을 늘려서 평생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315
  - (사)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지역 만들기 ... 318
  -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319

#### IV.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 1. 정보 지원의 화살 ... 321
  - (1)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개발, DMO에 대한 정보 지원 ... 321
  - (2) RESAS의 보급 촉진 ... 322
- 2. 인재 지원의 화살 ... 322
  - (1) 지방 창생 리더 육성·보급 ... 322
  -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 323
  -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323
- 3. 재정 지원의 화살 ... 324
  - (1)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 ... 324
  - (2) 지방재정 조치 ... 326
  - (3) 세제 ... 326
- 4.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 개혁 등과의 연계 ... 328
  - (1) 국가전략특구제도 등과의 연계 ... 328
  - (2) 규제 개혁과의 연계 ... 329

(3)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의 연계 ... 329

(4)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 ... 331

## 마지막으로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まち・ひと・しごと創生 総合戦略(2017 改訂版)

## 기본 방향

### 1.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 인구 감소 현황

일본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구추계<sup>1</sup>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693만 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6만 2천 명이 감소하여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59만 1천 명,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7.3%로 처음으로 27%를 넘었다.

합계특수출산율(이하 ‘출산율’)은 2005년 1.26을 기록한 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 1.4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는 1.44로 2년 만에 하락하였다. 연간 신생아수는 2016년 97만 7천 명으로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sup>2</sup>

최근의 출산율 상승 경향을 반영하여 2017년의 일본 장래 추계인구(중위가정)<sup>3</sup>에서는 장래 출산율을 이전의 추계 시 가정하였던 1.35보다 높은 1.44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65년의 추계인구는 이전 추계 시보다 약 670만 명 증가한 8,808만 명으로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율은 이전 추계 시보다 2%p 하락한 38.4%로 추정되어, 인구 감소의 속도 및 고령화의 진행 정도가 약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및 인구 감소 경향에 큰 변화는 없으며 전체적인 동향으로 볼 때 일본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는 역부족이다.

<sup>1</sup> 총무성 「인구추계(2016년 10월 1일 현재)」(2017년 4월 14일).

<sup>2</sup> 후생노동성 「2016년 인구동태통계(확정수)」(2017년 9월 15일).

<sup>3</sup>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2017년 4월 10일).

## 도쿄 일극집중 경향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도쿄 일극집중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및 나라현)과 나고야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이 4년 연속 전출 초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및 가나가와현)은 21년 연속 전입 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11만 8천 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하였다. 전출자 수는 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명 감소하였고, 전입자 수는 이를 상회하는 47만 8천 명(전년 대비 9천 명 감소)으로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 인구수는 2011년 이래 5년 만에 감소하였으나, 도쿄 일극집중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sup>4</sup> 2016년의 도쿄권 인구는 3,629만 4천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30%가 집중되어 있다.<sup>5</sup>

도쿄권으로의 이동 인구는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2016년에는 15~19세(2만 8천 명)와 20~24세(6만 9천 명)를 합하여 9만 명이 넘게 전입 초과하였고, 이는 여전히 증가세다(2016년에는 전년 대비 4천 명 증가).<sup>6</sup> 도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15년간 15~29세 청년인구의 약 30%(532만 명)<sup>7</sup>가, 신생아 수의 약 20%(17만 명)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은 15년 전에 비하여 신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쿄 23구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23.6%).<sup>8</sup>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쿄권으로의 인구 전출 초과 정도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권으로의 전출 초과 인구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와 현청(縣廳)소재지 등의 중핵 도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 초과 인구수 상위 6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50%, 상위 2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70%, 상위 3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sup>9</sup> 도부현(道府縣)별로 보면, 전출 초과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오사카부, 효고현, 아이치현 등 대도시권을 구성하고 있는 부현(府縣)들이고, 동일본의 각 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도쿄권에서는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75세

<sup>4</sup>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 이동 보고 2016년 결과」(2017년 1월 31일).

<sup>5</sup> 총무성 「인구추계(2016년 10월 1일 현재)」(2017년 4월 14일).

<sup>6</sup> 문부과학성 「학교기본통계」의 고등학교 소재지 현별 대학 입학 자수를 보면, 대학 진학 시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는 7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높은 비율 차지.

<sup>7</sup> 총무성 「국세조사」에 근거하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에서 작성.

<sup>8</sup>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하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에서 작성.

<sup>9</sup> 2016년 주민기본대장의 인구 이동 데이터에 근거하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에서 작성.

이상 고령자가 17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0</sup> 이에 따라 의료·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의 경우 재택의료 이용자 증가를 전제로 할 때, 도쿄권에서는 2025년까지 현재의 병상 수보다 약 1.9만 개의 병상 증가가 필요하다(2016년 기준, 약 27.1만 병상).<sup>11</sup> 복지의 경우는 도쿄도에서 2025년까지 약 5만 명분의 시설·거주계 서비스 증가가 필요(2015년 기준, 약 12.4만 명 이용)<sup>12</sup>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복지 인재를 중심으로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지역경제 상황

지역의 경제동향을 보면,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전과 비교하여 완전 실업률은 모든 도도부현에서 개선되었고, 유효구인배율(有効求人倍率)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도도부현에서 1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도 많은 도도부현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소득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고령화나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변화의 영향 등으로 지방에 따라서는 경제환경이 어려운 곳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나 생산과 같은 경제 활동의 동향은 지역 간에 편차가 있어, 도쿄권과 그 외 지역 간에 1인당 현민 소득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지방에서 경제의 선순환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의 축소를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축소가 인구 감소를 가속시키는 부(負)의 스파이럴(Spiral, 악순환의 연쇄)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대로 지방이 약화될 경우, 지방으로부터 인재 유입이 계속되어 온 대도시도 언젠가는 쇠퇴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방향에서 인구·경제·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sup>10</sup>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인구(2013년 3월 추계)」(2013년 3월 27일).

<sup>11</sup> 2025년의 필요 병상 수는 각 도현이 수립한 지역의료구상의 수치(추계치)를 집계한 것임. 현재의 병상 수는 후생노동성 「2016년 의료시설(동태)조사」(2017년 9월 26일)의 데이터에 근거함.

<sup>12</sup> 도쿄도 「제6기 도쿄도 고령자보건복지계획(2015~2017년)」,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개호(介護)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와 그룹홈 등의 거주계 서비스 이용자(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수치를 집계한 것임.

**1.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한다.**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제동을 걸고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생'과 '사람 창생'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쿄권의 활력 유지·향상을 도모하면서도 과밀화·인구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및 안전·안심 환경을 실현한다.

**2. 청년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을 실현한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결혼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 환경을 실현한다.

**3. 지역 특성에 입각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산간 지역을 비롯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안전·안심 및 여유로운 생활이 미래에도 보장되도록 한다.

인구 감소 극복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설사 단기간에 출산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신생아 수는 쉽게 증가하지 않아 인구 감소에 제동이 걸릴 때까지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게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남아 있는 선택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헛되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인구 감소 극복과 성장력 확보 시책을 추진한다.

**3.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확립**

지방 창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 중심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만든다는 흐름을 확실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負)의 스파이럴에 제동을 걸고 선순환을 확립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이 중요하다. 아베노믹스가 전국 방방곡곡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평균 소득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일자리가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마을'이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sup>13</sup>

<sup>13</sup> 도시지역에는 일자리 등의 조건이 맞으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약 40%라는 조사결과도 있음(내각관방「도쿄 거주자의 향후 이주에 관한 의향조사」(2014년)).

### (1) 일자리 창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활력·생산성 향상, 경제의 상황 및 변동에 대응한 고용 미스매치 시책 등 ‘고용의 질’ 확보·향상에 주력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안정적 고용형태+보람 있는 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환경이 필요하다. 노동력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고용의 질’을 중시한 시책이 중요하며, 경제·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및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발굴과 판로의 개척, 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 창출,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 기업·사업의 집중적 육성, 도시지역 기업의 지방 이전, 가치 있는 기업을 존속시켜 새로운 고용 창출로 연결시키는 사업 승계의 원활화, 농업·관광·중핵기업 등과 같은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흥 등을 통해 미래를 향한 안정적인 ‘고용량’을 확보하고 확대를 실현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의 도입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성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여성이 활약하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여성이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거주 장소를 찾아내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지역 내에서 여성 활약을 강화해야 한다.

### (2) 사람 창출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외의 유용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육성하여 지방으로의 이주·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청년들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지방에서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까지 끊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3) 마을 창출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방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을’의 집약·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급속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생활 기반의 유지·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개성을 살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ICT 등을 활용해 마을 만들기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출이 중요하다.

중산간 지역 등에는 지역적 유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안심 환경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콤팩트화와 대중 교통망의 재구축을 비롯한 주변과의 교통 네트워크 형성 추진, 광역적 기능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 등에서도 고령화·독신화 문제 대응, 재해 대비, 의료·복지·교육 등의 지역생활 지원 서비스 확보, 지역 커뮤니티 유지·재생, 데이터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문제 해결 및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4.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수립과 개정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의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을 위한 시책은 개별 문제에 대한 대응요법이 아니라 '일자리, 사람, 마을' 간에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선순환 확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에 기초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상승 효과 발휘를 포함한 효과의 검증 및 수정을 수행해 나가는 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14년 12월 27일 각의결정, 2016년 12월 22일 개정. 이하 「종합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의 구성원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및 관계부처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와 각계에서 제기된 수많은 제언 등을 토대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2014년 법률 제136호)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2015년부터 향후 5개년의 목표와 시책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부속 문서인 「액션플랜(개별시책 공정표)」에서는 개별시책의 성과목표와 추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현재 47개 도도부현, 1,740개 시구정촌에서 「도도부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하, 「지방관 종합전략」)이 수립되어, 지역의 실정에 입각한 구체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관 종합전략」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및 검토가 진행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교 및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처럼 지방 창생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가 자기 지역의 현상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총합전략의 중간 점검

2017년은 5개년 「총합전략」의 중간 연도에 해당하므로 4개 기본 목표(①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든다 ③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시대에 적합한 지역을 만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와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시책에 대해 핵심성과지표(KPI) 총 120건(4개 기본 목표와 관련된 KPI: 15건, 개별 시책과 관련된 KPI: 105건)을 진척 상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담당 장관의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KPI 검증팀(이하, 검증팀)’을 설치해, 전문적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 (A)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실적치가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
- (B) 현시점에서는 실적치가 (A) 이외의 것
- (C) 기타(현시점에서는 통계상 실적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KPI 120건 중에서 (A)가 85건, (B)가 13건, (C)기타가 22건이었다. (C)기타를 제외한 구성비는 (A)가 87%, (B)가 13%이다. 기본목표 KPI 15건에 대한 점검 결과는 [표 I -1]과 같다.

[표 I -1] 기본 목표 KPI 15건에 대한 점검 결과

구분	성과지표	2020년 목표	기준치	현재치	진척
기본 목표 ①	청년고용 창출 수(지방)	5년간 30만 명	-	18만 4천 명(2016년 추계치)	(A)
	청년 세대(15~34세)의 정규직 노동자 비율	전체 세대와 같은 수준	92.2%(2013년) 전체 세대 : 93.4%	94.3%(2016년) 전체 세대 : 94.5%	(A)
	여성(25~44세) 취업률	77%	69.5%(2013년)	72.7%(2016년)	(A)
기본 목표 ②	지방에서 도요권으로 전입	2013년 대비 6만 명 감소	46만 6,844명 (2013년)	10만 946명 증가 (2016년)	(B)
	도요권에서 지방으로 전출	2013년 대비 4만 명 증가	37만 320명 (2013년)	10만 398명 감소 (2016년)	(B)
	지방·도요권 간 전출·입	전출·입 균형	도요권 전입 초과 인구수 9만 6,524명 (2013년)	도요권 전입 초과 인 구수 11만 7,868명 (2016년)	(B)

구분	성과지표	2020년 목표	기준치	현재치	진척
기본 목표 ③	안심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40% 이상	19.4% (2013년)	42.6% (2017년 2월 잠정치)	(A)
	첫째 자녀 출산 전후의 여성 계속취업률	55%	38% (2010년)	53.1% (2015년)	(A)
	결혼희망 실적지표	80%	68% (2010년)	68% (2015년)	(B)
	부부 예정자녀 수 (2.12명) 실적지표	95%	93% (2010년)	93% (2015년)	(B)
기본 목표 ④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시정촌 수	150 시정촌	4개 시 (2016년 9월 말)	112개 도시 (2017년 7월 말)	(A)
	도시기능 유도구역 내 입지시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 수	100 시정촌	—	2018년 중 진척 파악	(C)
	거주 유도구역 내 인구의 점유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 수	100 시정촌	—	2018년 중 진척 파악	(C)
	대중교통이 편리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	(3대 도시권) 90.8% (지방중추도시권) 81.7% (지방도시권) 41.6%	(3대 도시권) 90.5% (지방중추도시권) 78.7% (지방도시권) 38.7% (2014년)	(3대 도시권) 90.9% (지방중추도시권) 79.3% (지방도시권) 38.9% (2016년)	(A)
	「지역공공교통 재편실시 계획」의 인정 건수	100건	13건(2016년 9월 말)	21건(2017년 10월 말)	(A)

이를 토대로 검증 팀에서는 기본목표 ①, ③, ④에 대해서는 시책이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지만, 기본목표 ②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든다’의 경우 시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지방과 도쿄권 간 전출·입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에 반해, 2016년 기준 도쿄권 전입 초과 인구수가 약 12만 명 규모에 이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 창생의 근간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목표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루어졌다.

## 중간점검을 토대로 한 도쿄 일극집중 시정 목표에 대한 기본적 인식

중간점검을 토대로 특히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으로부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책을 강화하여 기본목표 ②의 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감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쿄 일극집중은 집적의 메리트를 넘어서 장시간의 통근시간, 높은 주택 가격과 함께 보육 서비스와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대기자 등 생활 환경 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도쿄 일극집중의 진행에 따라 수도직하지진(首都直下地震) 등의 거대 재해에 따른 피해 증대 리스크가 커진다. 출생 중위(사망 중위) 추계<sup>14</sup>로 보면 25년 후에는 고령자 1명을 1.48명의 현역 세대(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쿄권으로 인구 집중이 계속될 경우, 상기 추계 이상으로 출산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으며, 보다 적은 현역 세대가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고령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은 소멸의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 국민들 사이에 사태의 심각성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시책 마련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최근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방 창생에 대한 열의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의식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 창생은 미래를 내다본 국가의 구조 만들기로서, 생산성 혁명과 인재 만들기 혁명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도 그 토대가 되므로, 대담한 추진이 필요하다.

## 생애주기에 대응한 정책메뉴의 충실·강화

중간점검 결과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패키지·개별시책을 수정하기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제8조제6항에 근거하여 올해도 「총합전략」을 개정한다.

도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 시 및 취업 시의 청년들이므로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대학 개혁의 추진과 함께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이동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생 100년 시대를 전망하고,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대응한 정책 메뉴를 충실·강화한다.

<sup>14</sup>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에서는 출생·사망 각각에 대해서, 고위·중위·저위의 3가지 가정하에 복수의 추계가 수행되었는데, 그중 출생과 사망 모두 중위의 가정을 이용한 추계.

### (1) 결혼·임신·출산·육아기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유지·창조하기 위해 ‘육아 세대(世代) 포괄지원센터’를 정비하고 주산기의료(周産期医療) 제공 체제를 확보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윈스톱으로 ‘포괄적 지원’을 담당하는 거점을 정비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 어드바이저’를 양성하여 기업에 직접 과견해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아웃 리치 지원’ 등과 같은 ‘지역 어프로치’에 의한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 (2) 유소년기~10대

지방 창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지역을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전체가 어린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하여 고교생들의 지역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커리어 교육을 추진한다.

어릴 때부터 지방 생활의 매력을 배우고 접촉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쿄로 진출한 경우에도 장래의 UJJ턴과 지방 이주·교류 촉진을 위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생에게도 농산어촌 체험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 (3) 청년층·근로 세대

청년 세대의 지방 정착·이주를 위해서는 지방이 ‘배움·일·주거’를 위한 매력적인 장소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쿄 일극집중의 현상과 문제, 지역산업·청년고용을 둘러싼 현상과 문제 등을 토대로 일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도쿄 23구 내 대학 정원의 억제, 지방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촉진한다.

지방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과 사업 승계를 통한 원활한 세대 교체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도쿄권에 머물러 살고 있는 지방 출신 학생 등의 지방 환류와 ‘지방 창생 인턴십’ 추진, 지방 취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반환 지원제도’의 전국적 전개도 진행해 나간다.

도쿄 23구로부터 본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거점 강화 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촉구한다. 이러한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프로페셔널 인재의 지방 환류를 도모하기 위해 도부현(道府県)에 설치된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4) 액티브 시니어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을 위해서는 청년들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지방 이주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고연령자가 희망에 따라 이주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인 ‘생애활약마을(일본판CCRC<sup>15</sup>)’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선도적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적 확산을 지원한다.

#### (5)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공통 시책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유발하기 위해 다음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다.

##### 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U/IJ턴 시책의 획기적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중 우수한 사례는 확산하고, 상호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U/IJ턴 시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②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 생활의 매력 홍보·체험

지방 생활은 통근 시간이 짧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주변에서 쉽게 자연과 접할 수 있다는 점, 신선한 농산물로 풍요로운 식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생활비와 주택 취득 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도 넓은 주택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등 ‘실질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유의 역사·문화·전통 등의 매력이 넘쳐나며, 당연하게 여겨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매력도 있다. 그리고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주하여, 혜택 받은 환경 속에서 일이나 연구, 문화·예술 등의 창조적 활동 등에 전념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지방 생활의 매력에 대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지(周知)·홍보를 강화하고 지방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지방 창생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방이 ‘자조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역의 시책을 정보·인재·재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지방 창생

<sup>15</sup>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약어.

판 세 개의 화살')해 나가기로 한다. 특히 중간 점검을 토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메뉴의 충실·강화에 기여하는 시책은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세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생산성 혁명·인재 만들기 혁명 등과의 정책 간 연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sup>16</sup>의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최전선인 지방에서 생산성 혁명과 인재 만들기 혁명을 실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AI)·로봇·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실현, 나이에 관계없이 다시 배움이 가능한 리커런트 교육(Recurrent Education)<sup>17</sup>과 고등교육 개혁,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에서 벗어난 기업의 인재 채용 다원화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산·관·학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중핵(中核) 산업 진흥과 전문 인재의 육성 등을 도모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생산성 혁명과 인재 만들기 혁명의 토대가 되는 지방 창생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국토 강인화(強靱化)' 등의 안전·안심 관련 시책과 조화를 추구하고 '지방 창생 IT 이·활용 촉진플랜'(2015년 6월 30일,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추진 전략본부' 결정)의 착실한 실행을 위해 농업IT시스템 보급 등 지역 내 ICT 정착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도모하고, SDGs 달성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향상 등과 같은 요소를 최대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 내 자율적 선순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시책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체적 최적화, 지역 문제 해결 가속화 등의 상승효과를 창출해 지방 창생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sup>16</su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 2015년 9월의 유엔 서밋에서 채택된, 2030년을 기점으로 하는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17개 개발 목표를 말함. 모든 관계자(선진국·개발도상국·민간기업·NGO·전문가 등)들의 역할을 중시하며, '어느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경제·사회·환경을 둘러싼 광범위한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함.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시 지침'(2016년 12월 22일, 제2회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본부' 결정)에서 정부 전체 및 관계 부처·청의 각종 계획과 전략·방침의 수립 또는 개정 시에는 SDGs를 주류화(mainstreaming)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sup>17</sup>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제창한 생애 교육의 하나.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순환을 위해 사회로 나온 사람의 학교 재입학을 보장하는 것임.

### 「총합전략」의 개정과 홍보·주지

국가는 지방 창생을 둘러싼 현상 및 사태의 엄중함에 입각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하나가 되어 지방 창생이 심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

지방 창생은 다음 세대 및 그 다음 세대에게 매력적인 일본을 물려주기 위한 장기간의 정책이다. 2018년은 5개년 「총합전략」의 마지막 해인 2019년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2020년 이후의 차기 5개년 「총합전략」의 정책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총합전략」을 토대로 젊은이가 장래에 꿈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지방’의 창생을 위해 거국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총합전략」을 개정할 때에는 이번 개정 취지 및 정책 패키지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친절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정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의 기존 우수시책 사례와 선진적 시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

## II

## 정책 기획·실행의 기본 방침

### 1. 기존의 정책에 대한 검증

기존의 지역경제·고용 시책 및 저출산 시책이 안고 있는 다음의 5가지 문제는 지방 창생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1) 부처별·제도별 ‘칸막이’ 구조

지역의 경영 인재 확보·육성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은 유사한 경우가 많고, 사업의 중복이나 소규모 사업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희망 순위가 급상승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칸막이’ 구조를 배제하고 정책을 횡적으로 연계할 때 효과는 매우 크다.

#### (2)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획일적 수법

각 부처의 개별 보조금 정책은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좁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모형 사업 등에는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몰려 ‘고만고만하게 닳은 듯 한’ 사업이 전국에서 여럿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 (3) 효과 검증을 동반하지 않는 ‘나눠 먹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객관적·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효과 검증을 실시하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시책은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정책 목적이 명확

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객관적인 효과 검증과 재검토 메커니즘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 (4) 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인 시책

기존의 시책 중에는 대증요법에 그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라기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다.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경제 현상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시책을 구조적으로 조립하여 깊이 있는 정책 패키지를 입안·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표면적이고 단발성 시책들이 많다.

#### (5)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없이 단년도의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시책과 단기간에 변경·폐지를 반복하는 시책들이 많다. 전문 인재의 육성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의 육성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기존 정책의 폐해를 배제하고 인구 감소의 극복과 지방 창생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 다음의 정책 원칙에 근거하여 시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1) 자립성

시책이 일과성의 대증요법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민간 사업자·개인 등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지역 내외에서 유용한 인재의 적극적 확보와 육성을 서두른다.

시책의 효과가 특정 지역·지방, 또는 거기에 속하는 기업·개인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므로, 설사 국가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지방의 사업이 계속되는 상태를 목표로 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책의 내용 검토 및 실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현상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배경을 추출하고, 지금까지의 시책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다음,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적인 대응뿐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시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 (2) 장래성

지방이 자주적·주체적으로 꿈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에 중점을 둔다. 활력 있는 지역 산업의 유지·창출과 중산간지역 등에서 지역적 유대감 속에서 마을이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실현하는 시책 등도 포함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최저 한도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내셔널 미니멈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지역성

국가에 의한 획일적 수법이나 ‘부처 간 칸막이’ 지원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실태에 맞는 시책을 지원한다. 지역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상을 분석하고 장래 예측을 실시하여 「지방관 총합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그 전략에 입각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국가는 지원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서서 인적(人的) 측면을 포함한 지원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비 등 주로 일본 전체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시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책의 내용·수법을 지방이 선택·변경할 수 있으며,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각 지역의 실상 및 장래성 분석, 지원 대상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 결과가 반영되는 프로세스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광역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 (4) 직접성

한정된 자원 및 시간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인구의 이동, 일자리의 창출 및 마을 만들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 대표에 더하여 산업계·대학·금융기관·노동단체·언론계·사업(士業, 변호사 등과 같이 명칭에 사가 붙는 직업), 곧 산·관·학·금·노·언·사 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책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연계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 (5) 결과 중시

효과 검증 체제를 갖추지 않은 ‘나뉘 먹기’식의 시책은 채택하지 않으며, 명확한 PDCA<sup>18</sup> 메커니즘하에서 단기·중기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 즉 목표로 하는 성과가 구체적이면서 적절한 수치로 표시됨으로써 그 성과가 사후에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 검증 결과에 따라 시책 내용의 변경이나 중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함으로써 검증 및 지속적인 시책 개선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sup>18</sup> PLAN(계획), DO(실시), CHECK(평가), ACTION(개선)의 네 가지 시점을 프로세스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프로세스를 사이클로 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매니지먼트 방법.

### 3. 국가와 지방의 대응 체제와 PDCA 정비

정책 5원칙에 근거하여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을 도모할 때는 지방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지방관 총합전략」을 추진하되, 국가는 동반자 입장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2006년 12월 27일 각의 결정, 이하 「장기비전」이라 함)과 그에 입각한 5개년의 「총합전략」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를 전망한 「지방 인구비전」과 5개년의 「지방관 총합전략」에 근거하여 지방 창생을 심화해 나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회 실태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 EBPM(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책 입안)<sup>19</sup>의 개념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PDCA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뿐 아니라 산·관·학·금·노·연·사와 주민 대표의 참여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체제하에서 기존 정책들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요구 충족에 필요한 정책 체계를 정비한다. 동시에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이라는 기존의 행정 단위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광역적인 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한다. 또한 국가·지방의 정보 시스템 개혁과 업무 개혁(BPR)<sup>20</sup> 등에 의한 운용 비용 삭감과 업무 체제 개혁을 통해 염출한 ‘재원’과 ‘인재’도 활용한다.

#### (1) 데이터에 기초한 국가의 「총합전략」과 「지방관 총합전략」

국가는 단기·중기의 성과 목표가 설정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각각의 진척에 대해 성과(outcome) 지표를 원칙으로 한 KPI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체제(PDCA 사이클)를 확립하고 있으며, 지방과 연계하여 지방 창생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 분석시스템(REASAS)’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추진 체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분석하고 「지방관 총합전략」의 기획·입안 등을 추진할 때는 지역 금융기관과 정부계 금융기관 등의 지식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지역 내외의 유능한 매니지먼트 인재를 확보·육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세제·규제 완화라고 하는 기존의 방법뿐 아니라 각각의 지역 문제에 대응하여 부하(負

<sup>19</sup>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약어.

<sup>20</sup>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어.

荷)를 주는 수법을 포함한 시책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이어서 RESAS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및 저출산 상황 등을 토대로 한 지역별 접근하에서, 각각의 「지방관 총합전략」에 지역의 문제 및 실정에 대응한 KPI를 설정함과 함께 데이터에 의한 정책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PDCA 사이클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오픈 데이터 시책 추진 등 관·민이 보유한 데이터의 유통 및 이·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 산·관·학·금·노·연·사 간 연계 추진

국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장기 비전’과 「총합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총합전략」에 포함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때도 ‘일본판 CCRC 구상 전문가 회의’, ‘정부 관계기관 이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운영 조직에 관한 전문가 회의’, ‘지방 대학 진흥 및 청년 고용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을 도입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진척 상황과 시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 창생을 자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과 지원을 위한 방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생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행정에만 닫혀 있지 않는 열린 체제하에서 지방 창생을 다면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사회 수요에 대응한 사용자 친화적 시책을 전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하여 「지방관 총합전략」을 수립했으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도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를 더욱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에서 지방 창생을 추진할 때는 이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지역이나 분야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거래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에 대한 유익한 조언과 파이낸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등 지역의 지방 창생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 간 연계 추진

국가는 각 지역에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시책을 준비할 경우, 관련 시책의 목표·내용·조건 등을 관계 부처 간에 통일·정리하고 가능한 한 패키지화하는 동시에 원스톱형 집행 체

제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국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성 넘치는 지방 창생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메뉴화한다. 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부처·청별 지원 시책에 대한 일원적 정보 제공과 매칭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한다.<sup>21</sup>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관 총합전략」 추진 시, 창업자 지원에 산업 진흥 정책 이외에 육아기 여성의 재취업 촉진 정책과 이주·정주 정책 등을 연계시키는 등 정책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패키지화와 원스톱화를 추진해야 한다.

#### (4) 지역 간 연계 추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 연계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연계중추도시권의 형성을 촉진하고 재정·정보 지원을 수행한다. 정주 자립권의 형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권 형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연계 시책을 활용해 광역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관광·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 간 연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에 따라 연계를 도모한다. 연계 구역 단위로 현황을 분석하고, 추출된 문제는 각각의 「지방관 총합전략」에 반영하여 대응책을 추진한다. 도도부현은 시구정촌 단위의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지방관 총합전략」에 반영하고, 시구정촌과 연계하면서 지방 창생을 추진한다.

---

<sup>21</sup> 2015년 7월부터 이주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일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국 이주 네비게이션’이 일반에게 제공되었음.

### III

## 향후 시책 방향

### 1. 정책의 기본 목표

#### (1) 성과(outcome)를 중시한 목표 설정

「총합전략」은 정책의 기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시책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의 진척 상황을 KPI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체제(PDCA 사이클)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 목표에는 일본의 인구·경제 중장기 전망을 제시한 장기 비전을 토대로 「총합전략」의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국가가 실현해야 할 성과 위주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장기 비전’이 제시하는 중장기 전망】

‘장기 비전’에서는 중장기 전망으로 ‘2060년에 인구 1억 명 정도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희망이 실현된다면 출산율은 1.8 정도의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출산율(국민희망 출산율)=1.8은 OECD 국가 중 절반 가까운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다. 일본에서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청년 세대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출산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도쿄권으로의 유입이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쿄권에서는 최근까지 연간 10만 명 정도의 전입 초과가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는 조짐도 나타나 ‘도쿄 일극집중’을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장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인구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이 실현된다면 2050년대의 실질 GDP 성장률은 1.5~2%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네 가지 기본 목표

「총합전략」에서는 4개 기본 목표를 국가 단위에서 설정하고, 지방에서의 다양한 정책 효과를 집약하여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도쿄 일극집중’을 시정해 나간다.

### <기본 목표 ①>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부터 착수한다. 2013년의 도쿄권 전출·입 상황을 보면, 35세 미만의 청년 세대에서는 약 10만 명이 도쿄 권으로 전입 초과하고 있는 반면, 35세 이상은 지방으로 전출 초과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도쿄권 전입 초과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매년 10만 명의 안정된 청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해(2016년) 2만 명, 2년차(2017년) 4만 명 등 매년 2만 명씩 단계적으로 지방에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만 명의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저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한다.<sup>22</sup> 2020년까지 누계 30만 명의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직종과 고용 조건, 생활 환경 부적합 등에 의한 고용 미스매치, 여성의 취업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잠재적 노동 공급력을 지역 고용으로 정확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과 노동 시장의 환경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정규직 비율 증가, 여성 취업률 향상 등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가 지역의 경제력·소비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고 지표로서 임금 상승률을 계측하도록 한다.

#### ■ 청년고용 창출 수(지방)

- ▶ 현황: 18만 4천 명
- ▶ 목표: 지방에 2020년까지 5년간 누계로 30만 명의 안정적 청년 고용 창출

#### ■ 청년 세대의 정규직 노동자<sup>23</sup> 비율

- ▶ 현황(2016년): 15~34세 정규직 비율 94.3%, 전체 세대의 정규직 비율 94.5%

<sup>22</sup> 도쿄권의 10만 명 전입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업 등에 의한 실업분까지 고려하여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세대 요인에 의한 고용의 자연 감소, 산업의 신진 대사에 따른 적정 폐업률 수준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10만 명의 고용 창출 목표로부터 출발하고, 향후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폐업 등에 의한 실업분을 고려한 고용의 순증가 목표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함.

<sup>23</sup> 자신의 희망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 ▶ 목표: 2020년까지 전체 세대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함(2013년 기준, 15~34세 정  
규직 비율 92.2%, 전체 세대의 정규직 비율 93.4%)

#### ■ 여성 취업률 향상

- ▶ 현황(2016년): 72.7%
- ▶ 목표: 2020년까지 77% 실현(2013년 기준, 25~44세 여성 취업률 69.5%)

※참고 계측: 임금 상승률

#### <기본목표 ②>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든다.

내각관방에 의하면 도쿄도 거주민의 약 40%가 지방으로의 이주에 대해 ‘이주할 예정’ 또는 ‘향후에 검토하고 싶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이주에 대한 불안·우려 요소의 첫째가 지방의 고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향후 지방에서 창출될 매년 10만 명분의 고용은 이러한 잠재적 희망자의 지방 이주·정착으로 연결해야 한다. 도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 지방 출신자의 고향 취업률 제고 등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 흐름 만들기를 추진하여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확립한다.

지방에서 창출될 연간 10만 명분의 고용 창출력을 활용하여, 연간 47만 명에 달하는 도쿄권으로의 전입자 수를 연간 6만 명 감소시키고, 연간 37만 명인 지방으로의 전출자 수를 연간 4만 명 증가시킨다. 도쿄권에서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 흐름 만들기를 통해 전출자와 전입자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도쿄 일극집중의 흐름을 멈추는 데 목표를 둔다.

#### ■ 도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출

- ▶ 현황(2016년): 10만 398명 감소
- ▶ 목표: 4만 명 증가(2013년 대비, 2020년까지)

#### ■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전입

- ▶ 현황(2016년): 10만 946명 증가
- ▶ 목표: 6만 명 감소(2013년 대비, 2020년까지)

#### ■ 이상에 의하여 2020년까지 도쿄권 전출입 균형

- ▶ 현황(2016년): 11만 7,868명 전입 초과

#### <기본목표 ③>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독신 남녀의 약 90%는 결혼 의사를 갖고 있으며, 희망하는 자녀의 수도 2명 정도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결혼·육아 희망이 실현될 경우에는 출산율이 1.8 정도의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의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은 ‘1억 총 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래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장래 목표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용이한 지역 만들기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심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할 수 있는 사회가 달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질 높은 직장을 만듦으로써 결혼 희망 실현율을 80%로 끌어올린다. 동시에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절 없는 지원과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 라이프 밸런스)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부가 희망하는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부부가 예정으로 하는 자녀 수의 실현 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안심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할 수 있는 사회가 달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40% 이상(2017년 2월 잠정치 42.6%)<sup>24</sup>
- 첫째 아이 출산 전후의 여성 계속 취업률: 55%(2015년 53.1%)
- 결혼 희망 실적<sup>25</sup> 지표: 80%(2015년 68%)
- 부부 자녀 수 예정 실적 지표<sup>26</sup>: 95%(2015년 93%)

#### 〈기본목표 ④〉 시대에 적합한 지역을 만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활력을 되찾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지방도시와 중산간지역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여 의료·복지·상업 등의 생활 서비스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입각하여 콤팩트한 마을을 만들고, 이들을 연계하는 교통 네트워크의 형성을 기초로 하는 다층적 지역 구조를 구축하여, 일상적 생활 서비스와 고차적 도시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sup>24</sup> 내각부에서 실시한 ‘인터넷에 의한 공생사회 및 어린이·육아 지원에 관한 의식조사’(2017년 2월)에서 ‘결혼, 임신, 아이·육아에 따뜻한 사회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sup>25</sup> 결혼 희망(이미 희망을 실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유배우자 포함)과 「총합전략」 기간(5년간) 경과 후의 결혼 실적 대비를 지표로 설정. 구체적으로는 ‘조사 시점보다 5년 전의 18~34세 인구 중 유배우자 비율(국세조사)과 5년 이내 결혼을 희망하는 자의 비율의 합계(A)’에 대한 ‘조사 시점의 23~39세 인구 중 유배우자 비율(국세조사)(B)’의 비율(=B/A)을 산출.

<sup>26</sup> 부부 평균 예정 자녀 수(‘완결 출생아 수’의 조사 대상인 부부가 조사 대상이었던 기간의 평균)에 대한 ‘완결 출생아 수’(결혼 지속 기간 15~19년 부부의 자녀 수)의 비율.

입지적정화 계획제도<sup>27</sup>를 활용하여 도시의 중심 거점과 생활 거점에 생활 서비스 기능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 주변과 대중교통 연선(沿線)으로 주거를 유도한다. 또한 콤팩트한 마을 만들기와 연동된 산업 전략을 확립해 서비스산업 등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역내형(域内型)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이들 시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절한 KPI를 설정하고 PDCA사이클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표의 유효성 검증과 논의를 토대로 지자체의 KPI 설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국가가 제시하도록 한다.

- 입지적정화 계획을 작성하는 시정촌 수: 300개 시정촌(2017년 7월 말 현재, 112개 시정촌)
- 입지적정화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도 시설을 대상으로 시정촌 전역에 존재하는 해당 시설 수에 대해 도시기능 유도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설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 수: 100개 시정촌
- 시정촌 전체 인구수에 대해 거주 유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 수: 100개 시정촌
- 대중교통 편리성이 높은 지역<sup>28</sup>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3대 도시권) 90.8%(2016년도 90.9%)  
(지방 중추 도시권) 81.7%(2016년도 79.3%)  
(지방 도시권) 41.6%(2016년도 38.9%)
-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sup>29</sup> 인정 건수: 100건(2017년 10월 말 현재, 21건)

## 2.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

### (1)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강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확립하고, 마을에 활력이 되돌아오도록 한다는 지방 창생의 이념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인

<sup>27</sup>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에 근거하는 계획 제도.

<sup>28</sup> 다음의 권역에 포함되는 구역을 말함.

- 철도 역세권: 오프 피크(off-peak) 시, 편도 운행 간격 20분 다음의 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권 내
- 노면전차·신교통시스템 역세권: 오프피크 시, 편도 운행 간격 20분 다음의 역·노면 전차 정류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권 내
- 버스 노선 연선권(沿線圈): 오프피크 시, 편도 운행 간격 15분 다음의 버스 노선에서 연선 300m권 내

<sup>29</sup>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59호)에 근거하는 계획 제도.

재와 자금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고 활력이 넘치며 수익성이 있는 산업을 형성하여 청년과 여성, 그리고 한창 일할 세대에게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방의 ‘평균 소득 향상’을 실현하고 로컬 아베노믹스의 침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매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일자리’의 창출 ② 빈 점포 등 지방의 유휴 자산 유효 활용 ③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검증하여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책 ④ 국가전략특구, 규제 개혁, 지방분권 개혁 등 지역에 대한 정책 간 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 ① 지역의 ‘돈벌이 역량’ 향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속성 있는 기업을 키우는 동시에 역내의 울타리에 갇혀 있기 쉬운 지역경제의 껍데기를 깨고 역외로부터 돈을 벌고 역외로부터 인재와 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강력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지방의 임금을 인상해 간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상사(商社)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 생산품 판로 확대, 관광지 경영의 관점에 입각한 관광지역 만들기과 브랜딩의 중심이 되는 DMO<sup>30</sup>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 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중견·중소기업 등의 사업 승계와 사업 재생, 신규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 도시에 대해 지역의 ‘돈벌이 역량’과 ‘지역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지역의 미래로 연결되는 투자를 촉진해 지역의 ‘돈벌이 역량’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견인사업의 촉진에 의한 지역 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40호, 이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견인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최전선인 지방에서야말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의 지방 도입을 통한 새로운 지방 창생을 목표로 한다.

지역 금융기관에는 용자를 통한 지역 기업 자금 공급과 함께 펀드를 활용한 리스크성 자금 공급에 대한 기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 및 계속 가능성에 대한 감정 기구로서의 공헌<sup>31</sup>이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지역 기

<sup>30</sup> 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의 약자. 다양한 지역 자원을 조합한 관광지의 일체적인 브랜딩, 웹·SNS 등을 활용한 홍보·프로모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는 관광 지역 만들기의 추진 주체.

<sup>31</sup>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 업무의 대상은 현재 거래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거래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와의 사업도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간 공동 사업도 포함된다.

업 지원 시책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특징적인 시책 사례를 표창하고 공표한다.

## ② 지역의 자산·인재 활용 등

지방에서는 빈 점포, 유휴농지, 오래된 가옥 등과 같은 유휴 자산을 많이 볼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sup>32</sup>의 도입·연계를 지원한다. 지역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지방 창생과 관련된 사업은 세무사 등과 같은 ‘사업(土業, 직업 명칭 끝에 사(土)가 붙는 직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지방 창생 칼리지’를 통한 지방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한다.

## ③ 지역의 실상 파악

인구 감소와 과소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진정한 의미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미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다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검토해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기업 간 거래, 사람의 흐름, 인구 동태 등)를 수집하고, 이를 알기 쉽게 ‘시각화(visualization)’하는 RESAS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책의 입안·실행·검증(PDCA)을 지원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방 창생 관련 교부금의 효과 검증과 문제 분석 실시, 지역별 산업 연관표 활용 등도 추진한다.

## ④ 지역에 대한 정책 간 연계 강화

예산·세제에 더하여 국가전략특구·규제개혁·지방분권 개혁 등과 연계해 관계 부처·청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방 창생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 (2) 새로운 ‘프레임’, ‘담당 주체’, ‘권역’ 만들기

‘돈벌이 역량’, ‘지역의 종합력’, ‘민간 지식’을 통해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고, 마을·사람·일자리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칸막이’ 사업 추진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관·민 협동 및 지역 연계)와 새로운 ‘담당 주체’ 만들기(지방

<sup>32</sup>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이 가능한 유휴자산(공간, 물건, 현금 등의 자산과 스킬, 지식 등의 능력) 등을 다른 개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동.

창업 사업 추진 주체 형성 및 전문 인재 확보·육성), 생활·경제 실태에 입각한 새로운 ‘권역’ 만들기(‘광역 권역’에서 ‘취락 생활권’까지)가 중요하다. 지방 창생을 위해 모든 주체가 연계·협동해 지방 창생 시책을 심화시킴으로써 일과성 시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 ①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칸막이’를 넘어선 관·민 협동과 지역 연계에 의한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콤팩트시티나 중심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경우, 도시의 ‘돈벌이 역량’을 제고한다는 도시 경영의 관점에서 실제로 도시에서 활동하는 민간 사업자와의 관·민 협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전략 및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추진이 요구된다. ‘생애 활약 마을’(일본판 CCRC)의 추진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사업자가 관·민 협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지방 이주 촉진, 고령자 취업·사회 참가 촉진, 의료·복지 관련 고용 기회 확보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DMO 형성을 비롯한 광역적인 관광 지역 만들기과 단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연계가 빠질 수 없다.

고령자 케어와 육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중산간지역 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서비스 사업, 농산품·공예품 등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사업,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인재 육성·교육 지원 사업 등 사회적 의의가 높은 사업 원천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조금이 차지하는 상황으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소셜 벤처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 ② 새로운 ‘담당 주체’ 만들기

지방 창생을 담당하는 새로운 ‘담당 주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의 형성 과 전문 인재의 확보·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 진흥 분야의 DMO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를 사용하여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지역 내 관·민 협동 및 광역적 지역 연계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를 수행하는 사업 추진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부업과 겸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및 창업의 수단 등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프레임 만들기과 시책들은 실제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재의 확보·육성·활약이 뒤따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창생 인재 플랜’에 따라 각 분야 및 지역의 인재 발굴, 연수·육성, 매칭에서 부임 후의 지원까지 각 단계에 맞는 지원책을 확립하고, 관·민 협동으로 지방 창생 담당 전문 인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확보·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새로운 ‘권역’ 만들기

지방 창생 심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활·경제 실태에 입각한 새로운 ‘권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역은 ‘광역 권역’부터 ‘취락 생활권’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이 고려될 수 있다. 각 권역별로 연계·협동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광역 권역’이라는 관점에서 연계중추도시권과 정주 자립권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향후에는 광역적 경제 진흥 시책을 담당하는 관·민 연계 조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작은 거점’의 형성을 통해 일체적인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취락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생활 및 복지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력을 유지시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개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 패키지

「총합전략」에서는 지방이 「지방관 총합전략」을 수립·실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 ‘정책 패키지’는 관계 부처·청이 하나가 되어 준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책에 대응한 공정표가 준비되어 있다. 그중에는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책과 구조적인 개혁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어떤 메뉴를 조합하여 채택하고 어떠한 속도감으로 시책을 추진해 갈지는 최종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지방관 총합전략」 수립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국가는 정책 5원칙하에서 지방이 특성에 맞추어 정책 메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독자적인 「지방관 총합전략」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현황 분석에서부터 전략의 수

립·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원해 나간다. 또한 지원책의 이용자 입장에 서서 정책의 실시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의 정책 메뉴 선택과 정책 전개를 통해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패키지’의 내용 자체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기로 한다.

## (1)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일자리 창출

### (가) 생산성 높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시책

#### A. 지역 기술의 국제화(로컬 이노베이션)

##### 【시책의 개요】

지역에서 글로벌 전개도 염두에 둔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계에 따라 지방 창생에 도움이 되는 일본형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국내 각 분야의 첨단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 중핵기업<sup>33</sup>의 글로벌 이노베이터 기업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이노베이터 기업에 의한 국제적 사업 전개 확대)과 ② ‘잠재 성장력 있는 기업’<sup>34</sup>의 지역 중핵기업으로의 혁신을 실현해 간다. 이를 통해 지역발(発)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역 중핵기업 후보 등의 선도적 프로젝트를 매년 200개 정도, 5년간 약 1,000개를 지원하여 평균 매출액 20억 엔(2011년)<sup>35</sup>을 거래처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포함하여 5년간 3배 증가를 목표로 설정한다.

### ● 주요 시책

#### (1)-(가)-A-①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일본형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 형성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일본형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 형성을 목표로 대학 등의 민간 기업 공동 연구 실시 건수 또는 금액 증가와 산·학·관이 집적된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청의 시책 마련이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학·공공연구기

<sup>33</sup>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 중핵기업’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10%(대기업 평균은 3.8%)를 넘는 중소기업 수가 약 3,600개사, 중소기업백서(2014년판)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커넥터-허브기업의 수가 3,621개사, 경제 산업성의 각종 표창 제도와 분석(‘활기 있는 제조 중소기업’ 등)의 대상이 약 2,000개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수천 개 정도의 규모로 추정됨.

<sup>34</sup> ‘잠재 성장력 있는 기업’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대기업 평균(평균 3.8%)을 넘는 중소기업 수가 약 1만 7천 개, R&D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가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3만 4천 개라는 점에서, 대체로 수만 개 규모로 추정됨.

<sup>35</sup> 호소야 유지(細谷祐二, 2014) 「글로벌 니치 톱 기업론」, 백도서방. 니치 톱형 기업 663사의 평균 매출액.

관(국립연구개발 법인 산업기술융합연구소, 공설시험연구기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간 연계·공동 연구를 실시해 왔다. 동시에 기술 이전 전문가에 의한 대학 등의 연구 성과와 민간기업 수요 간 매칭·연계 지원, 산·학·관이 집적된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 구축 지원 등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의 시책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형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중핵기업이 글로벌 이노베이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 기업에 의한 국제적 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1. 각 부처·청의 연계하에 경험이 풍부한 인재에 의한 기업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의 수요와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매칭 기능 강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간 ‘가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 지역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특색 있는 연구 자원의 활용, 사업화 경험이 있는 인재의 활용 등을 통해 대학 등에서의 산학 연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의 공설시험연구기관 등이 조정자 역할을 맡아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대학·공설시험연구기관·고등전문학교 등의 기술 원천을 매칭시킨 연구 개발 및 신사업 전개를 지원한다.
3. 벤처캐피털이나 기술 매칭 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와의 연계도 염두에 두면서, 지역발(発)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에 묻혀 있는 핵심적인 기술의 발굴과 육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을 첨단 과학기술의 사회 실증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동시에 민간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표준화 활용 지원 파트너 기관(지방자치단체·산업진흥기관, 지역 금융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과 표준화 전문기관인 일반 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 간 연계를 통한 지원 체제를 더욱 충실하게 하여,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의 발굴과 표준화를 지원한다.
4.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업화 등에 정통한 전문가인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조직화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를 활용하여, 글로벌시장도 염두에 둔 사업화 전략을 입안하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동시에 관계 기관 등과 연계하여 항공기·신소재 등 성장 분야별 공통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프로젝트 간 연계 촉진을 도모한다.
5.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기술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 이용 지원 체제를 운영하여 연구시설 등의 공용(共用)을 촉진한다.

### (1)-(가)-A-②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지역 중핵기업으로 혁신

지역에서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하고 잠재적 성장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금도 실시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핵기업 창출 지원, 정책금융·ODA를 활용한 중소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전국의 대학과 지역 기업 간 매칭·연계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업화 전략과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식과 인맥을 보유한 인재를 활용하고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지역 중핵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핵기업 후보와 파트너기업 및 대학 등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전개도 염두에 둔 지역 중핵기업의 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화 전략의 입안 및 판로 개척, 사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 기관 등과 연계하여 항공기·신소재 등 성장 분야별 공통문제에 대응하고, 프로젝트 간 연계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해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강점을 파악·분석하고 지역 내 지원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지원 체제 구축을 도모한다.

## B.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로컬 브랜딩)

### 【시책의 개요】

지역 농림수산업·관광 등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지역 내 장벽(남들 따라 하기, 횡적 연계의 어려움, 세대 간 인식 차이)과 인재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전략 수립과 사업 수행을 적절하게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인재와 자금 등을 역외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독자적인 중규모 시장 확립<sup>36</sup>을 위한 판로 개척과 브랜드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쿨 재팬(Cool Japan)'의 전개 등을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세계 수준의 DMO(선구적 인바운드형 DMO) 형성 수: 100 개
- 시범적 지역 상사(商社) 설립 수: 100(2017년 16개)

<sup>36</sup>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예품, 농림수산물, 관광자원의 상당수는 그 좋은 점을 살린 채로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서, 갑자기 전국 규모의 매스 시장을 겨냥하면 그 성격 자체가 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좋은 점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의 소규모 시장 만도 아니고, 전국 규모의 매스 시장 속에 녹아들어 버리는 것도 아닌, 그 좋은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중규모 시장을 종래의 소비시장에 추가하는 형태로 확립해 가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초래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시책임.

● 주요 시책

(1)-(가)-B-① 브랜딩 전략의 확립, DMO 육성·지원 등

지역 농림수산업·관광 등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역외로부터 필요한 인재와 자금 등을 끌어들이고, 중규모 시장의 확립을 위한 판로 개척과 브랜드화를 지향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 2016년 9월까지 72개 시정촌에서 ‘고향 명물 응원 선언’을 시행했고, ‘특산품 등 개발 사업’에 의한 시장 거래 달성율은 89.5%(2016년 6월 말 현재)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 활용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39호)에 근거한 사업 계획의 인정, 전통적 공예품 지원책, 고향 명물 상품·여행권 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린 생산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시책과 함께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관광자원, 농산품 및 전통적 공예품과 같은 지역 생산품과 자연경관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역외로부터의 ‘돈벌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이 하나가 되어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

1. 관광지 경영의 관점에 입각한 관광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 전체 브랜딩 전략 확립을 위해 일본판 DMO 등록 제도<sup>37</sup>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DMO의 형성·육성을 가속화한다. 또한 DMO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동시에 관광 지역 매니지먼트와 마케팅 수행을 위한 도구인 ‘DMO넷’을 제공해 전략적 마케팅 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DMO 간 연계 촉진, 우수사례의 전국적 전개 등을 통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를 촉진해 나간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를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 체제를 구축한 세계 수준의 DMO(선구적 인바운드형 DMO) 형성을 도모한다.
2. 지역상사협의회 등을 통해 발견된 지역 상사의 선도적인 사업들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상품 개발 등의 프로듀서 파견 지원, 나아가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이하 ‘JETRO’라 함)에 의한 해외 진출 지

<sup>37</sup> ①일본판 DMO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역 만들기 수행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 간 합의 형성 ②데이터의 계속적 수집·분석, 전략 수립, KPI 설정 및 PDCA 사이클 확립 ③관계자가 실시하는 관광 관련 사업과 전략 간 정합성에 관한 조정·체제 만들기, 프로모션 ④법인격의 취득, 책임자의 명확화, 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전문 인재 확보 ⑤안정적인 운영 자금 확보의 다섯 요건에 이미 해당하는 DMO는 일본판 DMO, 향후 해당 예정인 DMO는 일본판 DMO 후보 법인으로 등록하는 제도.

원 및 ‘쿨 재팬’ 시책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을 통한 인재 지원,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설비 도입 지원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각 단계에 대응한 정책 패키지를 구축하여 ‘지역상사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고향 명품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해 지역 생산품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생산품의 우수성을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확대한다.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해외판로 개척 및 관광·지역 특산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로컬 ‘쿨 재팬’을 추진한다.

### C. 지역 일자리 고도화(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 【시책의 개요】

지역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고 IT를 비롯한 전략적·효율적 투자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베스트 프랙티스 보급, 서비스 경영 인재 육성, 지원 거점 정비, 인증 제도 보급, 해외 진출 지원 등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0.8%(2011~2013년 평균)를 약 3배(2.0%)로 확대(2015년 1.3%)

### ● 주요 시책

#### (1)-(가)-C-①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지역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경제재생본부에 의한 ‘서비스산업 챌린지 프로그램’의 결정을 토대로 하면서 ‘일본 서비스대상(大賞)’ 창설, 중소기업과 로봇 미활용 영역에 대한 로봇 도입 실증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경제 전체 생산성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지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외부로부터 지역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내 서비스 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고 사업 규모를 집적시킴으로써 IT를 비롯한 전략적·효

육적 투자 보급을 촉진한다.

2. 업종별로 선진적인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보급 활동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챌린지 프로그램’의 각 시책을 지방에서 유효하게 전개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지역 서비스산업 플랫폼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패키지에 대한 지원, 전문 지원 인재의 리스트화, 인정 지원기관의 ‘시각화’를 통해 사업자와 지원 인재 및 기관 간 매칭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IoT<sup>38</su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202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절반이 국가와 연계해 지역 서비스 사업자에게 윈스톱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각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1999년 법률 제18호)의 인정 계획에 근거한 우수사례의 발굴과 전국적 전개, 서비스 경영 인재의 육성, ‘오모테나시(환대) 규격 인증’ 취득 기업을 전국 약 30만 개 사로 확대하는 시책 등을 추진한다.
- ② 지역에서의 IoT 비즈니스 창출 시책을 ‘지방관 IoT 추진 실험실’로 선정하고 새로운 IoT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한다.
- ③ 중견·중소제조업의 생산 현장을 대상으로 IoT·로봇 등을 활용하여 생산 현장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 응원대’의 거점 정비 등을 실시한다.
- ④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속성 정보 등에 대해 사업자 간 ID 연계·정보 연계를 가능케 하는 ‘오모테나시 플랫폼’, 본인의 참여에 기초하여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체제(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제공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PDS)의 활용 검토 등 IoT와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오모테나시’를 실현하는 공통 기반의 사회 실증을 실현한다. 실증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는 각 지역에 이를 보급해, 다양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와 연계를 촉진하고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집중하는 지역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타디움·아레나 등이 지역의 집객 및 교류의 중심지로서, 스포츠 관전과 음식업·숙박업·관광업 등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sup>38</sup> Internet of Things의 약어. 일본어로 ‘물건의 인터넷’이라고도 한다.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기술,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함.

있도록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타디움·아레나 개혁을 통한 지역 교류 거점 창출, 시설의 효율적 정비·운영을 위한 민간 활력 도입 촉진, 「지역미래 투자촉진법」의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 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을 실시하는 ‘스포츠 미래 개척 플랜’을 추진하고,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 간다.

#### D. 지역 기업의 경영 체제 개선과 인재 확보 등

##### 【시책의 개요】

지역 기업이 고성장을 목표로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평가 지표의 확립, 리스크성 자금(에퀴티 파이낸스, 메자닌 파이낸스)의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에 필요한 경영 개선과 사업 승계·사업 재생을 위한 발본적(拔本的) 대응, 원활한 사업 정리와 제2창업 시책, 담보·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용자와 자금 제공자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재의 환류 및 육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지원 및 창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양성 시책을 강화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개업률이 폐업률을 상회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영국 수준인 개업률·폐업률 10%대를 목표로 설정<sup>39</sup>(2016년 개업률 5.6%, 폐업률 3.5%)
- 대일 직접 투자 잔고를 2020년까지 35조 엔으로 함(2016년 말 27.8조 엔)

#### ● 주요 시책

##### (1)-(가)-D-① 로컬 벤치마크 등의 정비

지역 기업의 경영 체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및 지역 내 지원 기관이 상호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업의 건강 진단 툴(tool)인 로컬 벤치마크<sup>40</sup>를 보급·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에 로컬 벤치마크를 공표하고, 같은 해 4월에 금융기관·지원기관 및 사업(土業) 관련 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컬 벤치마크 활용 전략회의’를 설치해 관계자들이 활용 사례 등의 정보 교환과 툴의 내실화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중핵·중소기업 등의 지원 시책에서 로컬 벤치

<sup>39</sup> 개업률·폐업률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한 사회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함.

<sup>40</sup> 로컬 경제권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 판단과 경영 지원 등의 참고가 되는 평가지표·수법.

마크 활용을 추진·보급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 및 지원 기관과 기업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성장 자금 공급 등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영 지원을 촉진한다.

#### (1)-(가)-D-㉔ 리스크성 자금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정비

지방에 투자를 끌어들이 생산성이 높고 활력이 넘치는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수익화까지 장기간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성 자금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이 고성장을 목표로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원 기관 등에 의한 로컬 벤치마크 활용으로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과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한다. 리스크성 자금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 등이 설립하는 지역 펀드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이하 ‘DBJ’라 함),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정부계 금융기관,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이하 ‘REVIC’라 함) 등의 관·민 펀드를 비롯해 지역 금융기관과 REVIC 등이 연계한 지역 활성화 펀드가 자본성 자금을 공급하는 체제를 촉구한다.

증권사와 비공개 기업투자 펀드(Private Equity Fund)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능을 살린 시책을 촉구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자금 공급을 목표로 관·민의 금융 관련 플랫폼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 (1)-(가)-D-㉕ 창업 지원 및 창업가 교육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을 창출하고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리스크성 자금의 내실화와 함께 관·민이 일체가 된 창업 지원 및 창업가 교육, 유망 벤처에 대한 집중 지원, 선대 경영자로부터 경영을 계승한 후계자에 의한 사실상의 새로운 사업(제2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신진대사 촉진이 필요하다.

지역발(発)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법」(2002년 법률 제98호)에 근거하여 시구청촌이 작성하는 ‘창업 지원 사업계획’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창업 지원 체제 정비, DBJ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창조의 지방 보급·전개, 클라우드 펀딩 등을 이용한 소액 투자와 기부(고향 투자)의 활성화, ‘지역경제 순환 창조사업 교부금’(로컬 10,000 프로젝트) 등을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지원의 선도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내의 창업 시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가 교육 등을 지원하고

‘Entrepreneur Japan Campaign’(중소기업청)·‘고교생 비즈니스 플랜 그랑프리’·출장수업(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과 ‘DBJ 여성 신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DBJ) 등을 실시해 국민의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창업 희망자를 증가시킨다. 이와 함께 창업가와 혁신기업 등이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벤처를 만들어 내고, 그 벤처들이 우수한 인재·기술·자금을 불러 모아 발전을 계속하는 ‘벤처 에코 시스템’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우선 ‘Startup JAPAN’(가칭)이라는 통일된 브랜드하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벤처 후보인 ‘특대생(特待生, 장학생을 말함)’에 대한 관·민의 집중적인 지원,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실험 장소 등 벤처가 모이는 네트워크 거점 정비, 해외 벤처 이벤트 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화가 가능한 벤처 창출을 지원한다.

창업 희망자,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업 등 리스크의 관점에서 관의 보완적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이 창업자 대상 융자 활용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민 간 적절한 리스크 분담을 도모한다. 아울러 사업 승계를 계기로 경영 혁신을 수행하는 후계자와 기존 기업의 사업 전환을 수행하는 제2 창업자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촉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벤처캐피털 등과 연계하여 창업기 벤처기업에 대한 실용화 개발을 지원한다.

#### (1)-(가)-D-④ 원활한 사업 승계, 사업 재생, 경영 개선 지원 등

2025년엔 70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 경영자가 약 24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인 127만 명의 후계자가 아직 미정이다. 이는 일본 기업 전체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폐업이 급증하면 10년 누계로 약 650만 명의 고용과 약 22조 엔의 GDP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폐업 기업의 절반은 생산성이 높은 흑자 기업이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10년 가량을 사업 승계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조기에 계획적 사업 승계 준비부터, 사업 승계 후의 경영 혁신 등에 대한 지원까지 M&A의 추진 강화를 포함해 단절 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도부현이 지역 지원 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사업 승계 진단을 통해 경영자에게 조기·계획적 사업 승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사전적 승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 승계 후계자를 신속하게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사업인계 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후계자 부재 사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매칭시키는 ‘후계자 인재뱅크 사업’의 노하우 등을 시정촌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새롭게 개시한다.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사업인계 지원센터’의 상담 및 매칭 지원을 더욱 강화

하고 ‘사업인계 지원센터’와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이 연계하여 외부의 경영 인재를 매칭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사업 승계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사업 승계 관련 세제의 경우, 장래 경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유예 제도와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요구되는 고용 요건 등이 제도의 활용을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획기적 확충을 실현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생 지원협의회’에 의한 사업 재생계획 수립 지원과 경영 개선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획기적 사업 재생과 경영 개선, 자금 융통 관리, 재산 관리 등의 조기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 인재 및 차세대 후계자를 육성하는 중소기업대학교에 대해 지역의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를 확충하고 고도 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 (1)-(가)-D-㉔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한 지원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해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이용 촉진, REVIC의 경영자 보증부 채권 매입 및 정리업무 활용 촉진, ‘요로즈(萬事) 지원 거점’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 의한 상담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소규모 기업 공제 제도에 의한 폐업 준비 대출 실시, 폐업 준비 자금 융자의 자기 사정(自己査定)상 유의사항 주지(周知) 등을 통해 폐업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보상부 제도 용자 등 구상권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를 촉진한다.

#### (1)-(가)-D-㉕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잔고는 2015년 말 24.4조 엔에서 2016년 말 27.8조 엔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총리·각료의 톱 세일즈 전개, 세미나 개최·사절단 접대·외국 기업 초청 등에 대한 지원, RESAS를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기업 유치 능력 강화 지원, JETRO 등 관계 기관이 연계한 지원 거점 확충 등을 실시한다. 외국 기업 투자에 따른 새로운 경영 자원 유입과 지역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JETRO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유치 활동(유치전략 수립·홍보·개별 안전 유치 등)의 강화를 도모한다.

## E. 지역 전체의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

### 【시책의 개요】

지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재·자금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실시 체제를 강화한다. 서비스산업 등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역내형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의 콤팩트화·네트워크화를 지향하는 마을 만들기와 연동한 산업만들기 시책을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각 도부현(道府県, 都道府県에서 도쿄都 제외)의 성장 전략 수립 관련 협의회 등 조직 설립 수

## ● 주요 시책

### (1)-(가)-E-① 지역기업·산업의 성장전략 수립 촉진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케팅과 판로 개척 강화를 통한 역외로부터의 ‘돈벌이 역량’ 제고가 불가피하나, 지역 내부에서 조정을 수행하고 판로 개척 등의 프로젝트 만들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부족하다. 지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재·자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실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관계자와 인재·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갈 분야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과 지역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 매칭 기능 등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산업의 성장 전략 수립을 촉진한다.

## F. ICT 등의 이·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시책의 개요】

지역에는 안정적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은 것이 청년 세대가 유출되는 한 요인이다. 지역 산업의 생산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유효한 도구가 된다. ICT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수준 유지·향상 및 유연한 취업 환경 정비가 가능해지고, 문제 해결에 IC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노베이션과 신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전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ICT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과, 정비는 되어 있지만 이·활용이 진전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는 ‘지역 IoT 실장(實裝) 총합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생활에 친근한 분야인 IoT의 이·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트래픽<sup>41</sup> 유통 원활화를 통한 ‘국토 강인화(強靱化)’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IoT 데이터 등 지역 내 유통·활용의 기반이 되는 ‘지역데이터센터’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도

ICT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Wi-Fi,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고속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 지역의 통신·방송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에 대한 ICT 활용 시책 도입 촉진과 그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 창생 IT 이·활용 촉진 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지역에서의 ICT 정착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역 IoT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수: 2020년 목표 800개 단체(2017년 3월 현재, 128개 단체)
- 텔레워크제도 등에 근거한 고용형 텔레워커의 비율: 2020년 목표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2016년 7.7%).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① 필요한 자가 필요할 때 텔레워크 근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② 모든 정부기관에서 리모트 액세스 기능을 도입.
- 텔레워크 도입 기업 수: 2012년 대비 3배(2012년 11.5%)
- 전 도도부현에 L Alert<sup>42</sup> 도입(2017년 11월 현재, 45개 도도부현)
- 2020년까지 방송 콘텐츠 관련 해외 매출액을 500억 엔으로 증가(2015년 288억 5천 엔)

### ● 주요 시책

#### (1)-(가)-F-① ICT의 이·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ICT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유지·향상 및 유연한 취업 환경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의 창의력을 살린 이노베이션 및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생활에 친근한 분야인 IoT의 이·활용에 대해 2020년까지 전국 각 지역 보급을 목표로 하는 ‘지역 IoT 실장 추진 로드맵’에 근거하여 새롭게 수립하는 ‘지역 IoT 실장 종합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교육·의료·‘일하는 방식’·방재·농림수산업·‘공유 경제’를 포함한 관·민 협동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활용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 통신·방송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새로운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활용형 스마트시티 추진, 지역으로부터의 정보 송출 강화, 유연한 취업 환경을 실현하는 텔레워크를 도입한다. 지방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고향 텔레워크’, 무선 인터넷과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고속모바일, 브로드밴드 등의 지역 통신·방송환경을 정비한다.

41 네트워크를 흐르는 통신을 말함.

42 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공통 기반인 재해 정보 공유 시스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트래픽 유통 원활화를 통한 ‘국토 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IoT 데이터의 지역 내 유통·활용 기반이 되는 ‘지역데이터센터’ 정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의 창의력을 살린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능케 하는 ICT 이·활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G공간정보(지리공간정보)’의 이·활용과 L Alert의 보급·전개 가속화, 신속한 정보 송출과 송출된 정보의 확충 및 이·활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등을 바탕으로 주민 개개인이 자세한 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유저(User)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주체가 방재·농업·공유경제 등 생활과 친근한 분야의 IoT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를 특정하여 그 해결에 기여하는 레퍼런스(참조)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이·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기준의 명확화 등을 수행한다.

#### (1)-(가)-F-② ‘지방 창생 IT 이·활용 촉진 플랜’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생활의 질 향상

지역의 산업 활성화 및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IT 도입을 촉진하는 ‘지방 창생 IT 이·활용 촉진 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한다. 특히 ICT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조수(鳥獸) 피해 시책 등 분야별 ICT 활용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 포털사이트와 IT 이·활용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 각종 정보의 제휴와 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기반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IT화와 관련된 인재의 파견과 기업 지원, ‘사람’과 ‘일자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고향 텔레워크’ 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개인의 정보를 위임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정보 유통을 담당하는 정보이용 신용은행(이른바 정보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추진 등 IT와 데이터의 이·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신(新) 서비스 창출 가속화를 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오픈 데이터 추진율 100%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데이터의 가공·공개 등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시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간 조정·중개 기능을 보유한 ‘오픈 데이터 테스트베드’ 정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오픈 데이터 전도사’를 파견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IT화와 업무 개혁(BPR)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언과 의견 교환을 수행하는 등 변혁 의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시나 생활 재건 지원 시,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하게 주시시키는 동시에 SNS 등의 정보를 방재·감재

(減災)에 활용해 나간다.

## G. 지역의 총력을 기울인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시책

### 【시책의 개요】

지역이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선순환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강한 지역경제로의 전환과 지역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를 도모한다.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의 실증·장착을 통한 새로운 지방 창생을 목표로 지방 창생의 관점에서 혁신적이며 선도성과 전국적 전개 가능성이 가장 우수한 시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비롯한 관계 부처·청의 지원을 시행한다. 사회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식 검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역경제 순환 창조사업 교부금’(로컬 10,000개 프로젝트)의 지역 고용 창출 효과: 4.9배(7년)
-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견인 사업에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여 3년에 2,000개 정도의 기업 지원을 목표로 설정((1)-(가)-A의 KPI 포함)

## ● 주요 시책

### (1)-(가)-G-① 지역의 총력을 기울인 시책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일하는 장소’와 ‘고용’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산·학·금·관이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과 자금을 바탕으로 고용 흡수력이 큰 지역 밀착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 10,0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이 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323개 사업에 ‘지역경제 순환 창조사업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요자·지역 에너지 회사·금융기관 등이 총력을 기울여 바이오매스·폐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사업을 성장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16년까지 39개 단체가 마스터플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관계부처·청 TF(테스크 포스)와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며, ‘지자체 주도의 지역 에너지 시스템 정비 연구회’를 개최해 지역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정비의 표준적인 프로젝트 도입 모델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강화를 목표로 공유 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새로운 생활 산업 실증·장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

런 시책을 지원하는 ‘공유경제 활용 추진사업’을 실행한다. 마이 넘버 카드(My Number Card)를 활용해 공공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 카드를 한 장으로 묶는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포인트와 건강 포인트 등을 클라우드화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의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로 합산하여, 다양한 주민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비 확대에 이어서도록 하는 ‘주민 총 활약, 지역 소비 확대 사이클’을 전국적으로 확립한다.

#### (1)-(가)-G-② ‘지역경제 시각화(visualization)’ 추진

지방 창생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의한 지역경제 분석에 기초하여 시책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관계자가 참여해 수립된 「지방관 총합전략」의 추진과 실천을 정보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관한 관·민의 데이터를 알기 쉽게 표시해 제공하는 RESAS의 경우, 지금까지 충실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노동생산성 등의 동향 분석과 숙박자 경향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역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량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2017년 6월에는 이용 가능한 브라우저가 추가되었으며 10월에는 지도 기능이 개선됐다. 나아가 ‘정책 입안 워크숍’과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을 통해 RESAS의 이·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RESAS의 경우, 지속적으로 각종 데이터 제공과 편리성 향상(유저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노력 이외에 RESAS의 보급 촉진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에 데이터 이·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1)-(가)-G-③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견인 사업 촉진

지역경제를 살펴보면, 기업 수익과 고용은 호조를 보이거나 기존의 제조업 등에 대한 설비 투자는 미약하다. 그 이유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은 지역에서의 신규 입지가 저조하고, 비제조업(도·소매 등)은 대도시권에 비즈니스와 투자가 집중됨을 들 수 있다.

한편 성장 제조업과 관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성장성 높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해짐으로써 지역경제의 돈벌이 역량과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31일에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시행하였으며, 동 법률에 근거하여 같은 해 9월 29일에 39개 도부현과 관계 시정촌에서 제출된 70개의 기본계획을 동의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지방창생추진교부금의 활용을 포함), 세제, 금융, 정보, 규제 완화 등 다

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견인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2017년 12월에 기업의 부가가치, 성장성, 지역경제 거래의 결절성 등의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추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견인 사업의 시행 주체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 중핵기업 2,000개사를 선정·공표한다. 향후 선정된 기업이 지역 견인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첫째, 스스로의 잠재력을 알고 「지역미래투자촉진법」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견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후원한다. 둘째, 관계 부처·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각종 지원기관(지역 금융기관, 상공단체, 공설시험연구기관 등)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선정된 기업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지원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셋째, 각종 지원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1)-(가)-G-④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 등의 실증·장착을 통한 새로운 지방 창생

지역의 산·관·학·금 등이 일체가 되어 추진 중인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창생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시책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여 선도성과 전국적 전개 가능성이 가장 뛰어난 제안에 대하여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이나 ‘지역경제 순환 창조사업 교부금’,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등 관계 부처·청에 의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실시하는 체제를 추진하고 근미래기술의 실증·장착 등을 통한 새로운 지방 창생을 지향한다.

#### (1)-(가)-G-⑤ 사회적 사업을 둘러싼 환경 정비

지역에는 고령자 케어, 육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중산간지역 등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생활 서비스 사업, 농산품·공예품 등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사업, 사람들로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인재 육성·교육 지원사업 등 사회적 의의가 높은 사업 원천이 많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이 차지하는 상황에 빠지기 쉬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견실한 사업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사업 구축을 추구하는 소셜 벤처의 확충을 통해 앞서 말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부터의 접근, 행정으로부터의 접근, 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접근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의 사회성에 대한 폭넓은 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민간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사회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주도에 의한 유연한 인정 수법의 확립을 목표로 시범적인 시책과 그 효과 검증을 실시한다. 사업 실시 주체를 최대한 조기에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추구하는 방법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sup>43</sup>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셜 벤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원을 실시한다.

## H. 종합적인 지원체제 개선

### 【시책의 개요】

(1)-(가)의 중점시책을 포함한 관련 시책의 유효한 실시를 위해 산업·금융·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 지원체제의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산업·금융·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지역 시책에 대해 자립 및 계속되고 있는 시책의 건수

## ● 주요 시책

### (1)-(가)-H-① 지역경제 중핵인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역외시장 진출과 ‘돈벌이 역량’ 향상

역외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지방의 중핵에 해당하는 제조업·서비스업·농림수산업 등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돈벌이 역량’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관된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산업·금융이 일체화된 종합 지원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에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청에서 정리한 ‘지방의 중핵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에 근거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JETRO를 비롯한 지원기관이 연계한 ‘신(新) 수출대국 컨소시엄’ 하에서, 계획 수립에서 해외 판로 개척, 현지 진출 후까지 단계별 문제에 대응하여,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과 해외기업과의 매칭, 법적인 조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1)-(가)-H-②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시책의 실시

(1)-(가)의 관련 시책들을 유효하게 실시해 나가기 위해 산업·금융·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된 종합지원체제의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금융 양면에서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생애주기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 해결과 생업적(生業的)인 분야<sup>44</sup>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의 창업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주적인 시책을 관·민 일

<sup>43</sup> 행정, 민간사업자 등이 연계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때의 자금 조달 수법 중 하나. 민간 노하우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문제 해결과 행정비용 감축의 정도에 대응하여 행정으로부터 지불이 이루어지는 성과연동형 구조.

<sup>44</sup> 가족 종사자에 의존하고 있는 개인 상점 등에서 보여 지는, 가게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영으로 성립되는 사업 분야.

체가 되어 지원한다. 지원책의 내용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기업과 지역금융기관, 정부계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금융기관 등에 의한 지역기업 지원시책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특징적인 시책사례를 표창하고 공표한다.

## (나) 관광업 강화 지역에서의 연계체제 구축

### [시책의 개요]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방 창생에서, 관광은 왕성한 인바운드 수요를 흡수해 교류 인구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관광의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관광을 통한 지방 창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의 일본을 지원하는 관광 비전’ (2016년 3월 30일 ‘내일의 일본을 지원하는 관광 비전 구상 회의’ 결정) 등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DMO 100개소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판 DMO’ 등록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일본판 DMO’ 후보 법인의 등록 수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DMO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지 경영과 관련한 노후와 인재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국적인 시책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수 사례의 발굴 및 전국적 전개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보·인재·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숙박세 활용을 비롯한 안정적인 운영 자금 확보 방법도 검토한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를 지방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지오파크, 숲·마을·강·바다 등의 가치 있는 자연, 지역 특산품과 식문화, 프로 스포츠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 프로그램, 일본 유산 등 문화 자원과 오래된 민가,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등의 역사적 자원,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활용해 그곳에 가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 전략과 연계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 관광 지역의 매니지먼트 강화, 관·민이 협동해 전략적 프로모션을 통한 수요 환기, 외국인 여행자가 음식을 즐기는 환경 등을 더욱 정비해 나간다.

체제 중의 소비 환기를 촉진해 외국인 여행자 수의 증가가 국내에서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비액 확대가 지방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환경 정비, 외국인 여행자의 체제 중 소비 환기 촉진, 편리성 향상 등을 위한 유치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여행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활한 출입국 체제 정비, 적절한 규제하에서 니즈에 대응한 민박 서비스 제공,

니즈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역 안내사의 자질 유지·향상, 단체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랜드 오퍼레이터(Land Operator)<sup>45</sup> 업무의 적정화, 관광안내소 및 기타 관광 거점 정보·교류시설의 정비·개량 등 손님맞이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해 간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방일 외국인의 여행소비액을 8조 엔(2016년 3조 7,476억 엔)으로 확대
- 세계적 수준의 DMO(선구적 인바운드형 DMO) 형성 수 100(다른 시책 분야의 지표와 중복)
- 2020년까지 방송 콘텐츠 관련 해외 매출액을 500억 엔으로 증가(2015년 288.5억 엔) (다른 시책분야의 지표와 중복)

## ● 주요 시책

### (1)-(나)-① DMO를 중심으로 관광지역 만들기과 브랜딩 추진

2016년의 외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한 2,404만 명, 여행 소비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 7,476억 엔으로 순조롭게 증가하였다. DMO의 경우, 2017년 11월 말 현재 41개소의 일본판 DMO 및 133개소의 일본판 DMO 후보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그 배경으로는 비자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 여행자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 확충,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체제의 내실화, 항공 네트워크 확대, 방일 프로모션 등 정부의 일관된 시책을 들 수 있다. 관광이 갖는 광범위한 경제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관광을 통한 지방 창생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DMO를 중심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판 DMO 등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정보·인재·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일본판 DMO 형성·확립 관련 지침’의 충실화 등 우수 사례의 발굴과 전국적 전개를 추진하고 전국의 시책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DMO(선구적 인바운드형 DMO) 형성과 육성을 강화해 나간다.

### (1)-(나)-②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보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의 보물인 문화재를 적절하게 보존·활용하며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일본 유산’의 인정과 ‘역사 문화 기본 구상’ 수립 지원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관광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개별 문화재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를 일체

<sup>45</sup> 여행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해외의 지상부문의 수배를 하는 업자를 가리키며, 지상수배업자라고도 함.

적으로 정비하고 2020년까지 문화재를 중핵으로 하는 관광 거점을 200개 정도 형성한다 (2017년 현재, 114개소). 또한 일본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예술제 등을 충실하게 발전 시킨 국제 문화예술 홍보 거점 형성과 알기 쉬운 문화재 해설 및 다언어화 등을 통하여 인바운드(inbound)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낸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 실시, 극장·음악당 등의 활성화, 지역의 미술관·박물관을 중핵으로 하는 문화 클러스터(문화 집적지구) 창출 및 국립 문화시설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하여 문화 자원을 활용한 GDP 확대를 지향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이 자랑하는 문화 자원의 계승·발전과 창조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등의 창출을 위해 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활용을 중시한 ‘문화 경제 전략’을 2017년 중에 수립하고, 그 내용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특히 문화에 관한 산업·고용 창출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UJ턴 촉진으로 인한 교류·체제 인구 증가와 인바운드 확대에 기여하는 ‘도시의 변화함 창출’을 통한 대도시 이외로의 인구이동 흐름 형성 등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방 창생 시책을 관계 부처·청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주체인 ‘지역 스포츠 커미션’ 등이 실시하는 지역 독자적인 스포츠 투어리즘 개발, 이벤트의 개최, 대회·합숙 유치 등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스타디움·아레나 등 스포츠 시설의 매력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한다. 이처럼 스포츠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통하여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스포츠를 통한 GDP 확대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스포츠 목적의 방일 외국인 수<sup>46</sup>는 250만 명 정도(2014년 86만 명에서 2016년 약 150만 명으로 증가), 국내 스포츠 투어리즘 관련 소비액<sup>47</sup>은 3,800억 엔 정도(2014년 1,973억 엔에서 2016년 약 2,542억 엔으로 증가)를 각각 목표로 설정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의 키포프 이벤트로서 2016년 10월에 개최된 ‘스포츠·문화 월드 포럼’<sup>48</sup>과 올림픽·패럴림픽 교육의 전국 전개를 통하여 올림픽·패럴림픽 움직임의 파급에 의한 스포츠를 지역 자원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풍부한 스포츠 자원(학생 운동선수·연구자·지도자 등의 인재

<sup>46</sup> 일본 정부 관광국이 공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에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관광청)의 ‘일본 체제 중에 한 일(복수 응답)’ 가운데 ‘골프’, ‘스키·스노보드’, ‘스포츠 관전(스모·축구 등)’의 선택 비율을 곱하여 산출.

<sup>47</sup> ‘여행·관광 동향 조사’(관광청)의 여행 소비액 가운데, 관광·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여행에서 ‘스포츠 시설’, ‘스키장 리프트 대’, ‘스포츠 관전·예술 감상’과 관련되는 소비액을 합계하여 산출.

<sup>48</sup>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직후인 10월 19일~22일에 교토와 도쿄에서 개최하였다. 각국의 스포츠 장관이 모인 국제회의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문화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세계 경제 포럼’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세계에 광범위하게 일본의 매력을 알림.

와 시설 등)을 보유한 대학에서는 학교 전체의 스포츠 분야 업무를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와 인재의 배치를 촉진하고,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스포츠 합숙을 활용한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광 전략과 연계한 지역 특유의 스토리가 있는 음식 제공, 외국인 여행자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정비, 관광 지역 매니지먼트 강화,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책정 및 전략적 프로모션 추진, 국가 주최 국제 회의 등의 지방 개최 추진(일본학술회의가 주최하는 국제 회의의 지방 개최 시, 일본학술회의가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해 지역 사회 학술 진흥 등의 관점에서 기획·추진하는 ‘지방 학술회의’ 개최 등) 및 지역 MICE 유치 촉진, 해외 시장의 니즈를 숙지한 프로듀서 인재 파견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마,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 콘텐츠의 국내외 전개 추진, 문화 자원의 활용, 오래된 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관광마을 만들기의 중심으로 재생·활용하는 사업의 추진(2020년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전개),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등의 새로운 관광 자원 개척, ‘미치노에키(道の駅)’와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지역 농림수산물 및 특산품 판매 촉진, 인프라의 관광 자원 활용, ‘호스트타운’<sup>49</sup>의 추진에 의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 특색 만들기 촉진, REVIC과 지역 금융기관 등이 설립하는 지역 관광·마을만들기 활성화 펀드와 CJ기구 활용, 로케 투어리즘이나 에코 투어리즘과 같은 테마별 관광 자원의 네트워크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를 도모한다.

관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국립공원, 지오파크를 비롯한 가치 있는 지역 자연 자원이므로, 이를 개발해 매력을 높이고 보호와 이용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자연의 혜택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연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숲·마을·강·바다가 연결되는 일련의 권역으로 파악해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질 정화, 재해 방지·경감,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자연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의 가치를 시각화하는 동시에,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도시와 지방이 일체가 되어 자연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과 인재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비롯한 산업 유산에 관한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여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개최해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비에 착수한다.

<sup>49</sup> 지역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의 사진 캠프 유치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회 참가국·지역과의 인적·경제적·문화적인 상호 교류를 도모하는 것.

### (1)-(나)-㉓ 관광소비 확대 등을 위한 손님맞이 환경 정비

2016년의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한 2,404만 명, 여행소비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 7,476억 엔으로 순조롭게 증가하였으며, 인바운드 소비는 일본 경제를 밀받침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는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 여행자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 확충, CIQ체제의 충실화, 항공 네트워크 확대, 방일 프로모션 등 정부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 시책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액 확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환경 정비, 다언어 대응의 충실화, 무료 무선 인터넷 환경 등 통신험정 정비, 관광안내소 기타 관광거점 정보·교류시설의 정비·개량, 공중화장실의 수세식화 등 촉진, 2차 교통의 확보와 편리성 향상, 지방공항·항만의 CIQ체제 확충, 크루즈선 수용환경 개선, 여객항로 활용, 하네다공항의 비행 경로 재검토 등을 통한 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 지방공항에 대한 국제선 취항 촉진, 적절한 규제하에서 수요에 대응한 민박서비스 제공,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와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역 안내사의 자질 유지·향상, 단체 여행의 질 관리를 위한 랜드 오퍼레이터(Land Operator) 업무 적정화 등과 같은 손님맞이 환경 정비와 함께 상점가 등에서의 면세수속카운터와 크루즈부두의 임시면세점 신고제도 활용을 촉진해 나간다.

### (다)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시책의 개요]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강화해 나가는 정책(산업정책)과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정책(지역정책)을 명확하게 하면서 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업은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도모하는 가운데 성장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수산업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 및 유통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이 보유한 거대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아름다운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책별로 그 목적, 대상, 시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 프런티어의 확대’, ‘밸류체인 구축’, ‘생산현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산업 정책과,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도모하는 지역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자동차의 양대축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냄으로써 순환형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며, 기업 진입을 포함하여 유희 농지 발생 방지 및 해소와

그 활용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2016년 11월에는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개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농림수산물 수출인프라 정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생산자재 가격인하, 유통·가공구조 개혁, 생유(生乳) 유통개혁, 토지개량 제도 개선,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수출 인프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 대한 정합적·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농정이 ‘농정 신(新)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산업화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입품으로부터의 국내시장 탈환, 수출력 강화, 마케팅 역량 강화, 생산현장 체질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향상, 유희농지의 발생 방지와 해소 등 성장산업화에 동참하는 생산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영 안정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의 충실화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도 강하고 풍부한 농림수산업과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산어촌을 실현한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2020년까지 6차 산업화 시장규모를 10조 엔으로 증가(2015년 5.5조 엔)
- 2019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 엔으로 증가(2016년 7,502억 엔)

**● 주요 시책**

**(1)-(다)-① 수요 프런티어의 확대, 밸류체인 구축 등**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13년 5,505억 엔에서 2016년 7,502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6차 산업화 시장규모는 2012년 1.9조 엔에서 2015년 5.5조 엔이 되었다.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과 일본 식문화·식산업의 해외 전개와 같은 수요 프런티어 확대, 6차 산업화 및 농·상·공 연계 추진 등의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이후 다음의 시책을 실시한다.

1. 수요 프런티어의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 전략’(2016년 5월 19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본부’ 수립) 및 ‘농림수산물 수출 인프라 정비 프로그램’(2016년 11월 29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본부’ 작성)을 착실하게 실행하여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재외공관과 재팬하우스 등을 일본 농림수산물과 일본음식·식문화의 홍보 거점으로 활용한다. 동시에 일본 국내 외에서의 관광전략 연계 음식 홍보 등을 통한 인바운드 대응과도 연계하면서 2017년 4월 1일에 설치한 ‘일본식품 해외프로모션 센터(JFOODO)’를 통한 프로모션·브랜딩전략의 입안·실행, 수출상대국의 도매·소매업자와 레스토랑에 대한 판매 촉진 강화, 수출기지로서의 도매시장과 식육(食肉)가공시설 및 해외의 직거래시장 정비 등

지역 생산·유통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일본 식문화·식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일본 전체적으로 추진한다. 일본 쌀(粃) 국제통용 규격 및 인증체제 구축,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활용 등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2.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A-FIVE<sup>50</sup>)의 출자, 로봇기술과 IT 등의 첨단기술 도입 등 타 산업과도 연계하면서 6차 산업화에 의한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3. 생산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가공 업계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국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함으로써 안전·안심의 국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기여하는 등 소비자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1)-(다)-㉔ 농업 생산현장 강화 등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 유휴농지의 발생 방지 및 해소, 미곡 정책 개혁 등 농업 생산현장 강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다면적 기능 유지·발휘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18년 이후 다음의 시책을 실시한다.

1. 농업 생산 현장 강화를 위해 경영 감각을 가진 후계자의 육성·확보, 농지 중간 관리기구와 토지 개량 추진 확대를 통한 대구획(大区画)화·범용화에 의한 농지 집적, 에너지 절약형 기계 정비 등을 통한 생산 기반 강화,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돕는 로봇 기술 및 IT를 활용한 전략적·혁신적 기술의 개발·활용(표준화된 농업 IT 시스템의 보급을 포함)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농지 플랜’을 활용한 의견 교환과 유휴 농지에 대한 과세 강화로 농지 중간 관리기구에 대한 농지 임대를 촉진하고, 유기 농업·에코 농업의 추진 등 중산간지역의 농업인 수익력 향상을 지원하며, 유휴 농지의 발생 방지와 해소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땅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바른 농업용 하우스 등에 대한 「농지법」상의 취급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속 미등기 농지 등의 농업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우량 농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산업 도입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17년 법률 제48호)을 활용하여 농촌민박, 기업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ICT 관련 산업,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 ‘생애활약마을’(일본판 CCRC) 관련 산업 등

<sup>50</sup>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und corporation for Innovation, Value-chain and Expansion Japan의 약어. 농림 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 활동등에 대해, 출연이나 경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설립.

농촌에 부존(賦存)하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및 농촌지역 입지 수요가 있는 산업의 입지·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유희농지 활용과 함께 농촌지역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추진한다. 이들 시책이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지방 창생추진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미곡 정책 개혁은 2018년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 배분을 폐지하는 등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아울러 농정 등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과 정보 제공·수집 등을 통해 농업 생산현장과 농정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2.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의 다면적 기능 유지·발휘 시책과 함께 조수(鳥獸)피해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포획된 조수를 지역 자원으로 삼아 식용으로 이용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 (1)-(다)-③ 임업의 성장산업화

국산 목재의 공급량은 2015년 2,492만 m<sup>3</sup>에서 2016년 2,714만 m<sup>3</sup>로 증가하였다. 임업의 성장산업화와 산림자원의 적절한 관리가 양립될 수 있도록 시정촌은 경영 의욕을 상실한 산림 소유자로부터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탁받아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임업경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임업 경영의 집적·집약화를 도모한다. 재위탁이 불가능한 산림 및 재위탁되기 전의 삼림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공적(公的) 관리를 수행하는 새로운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계획적 임도 정비와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임업경영자와 소매상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의 확보·육성 등 저비용으로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구축한다. 나아가 임업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계와 연계한 국산 임업기계 개발, 자벌임가(自伐林家)<sup>51</sup>를 포함한 다양한 임업 후계자의 육성·확보를 도모한다.

CLT<sup>52</sup> 보급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비주택 분야에서의 JAS(일본농림규격) 무구재(無垢材) 이용 확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촉진, 목질(木質)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등 새로운 목재수요의 창출과 함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 관계자에 의한 목재 등의 수급 정보 공유, 산림 소유자와 제재공장 간 협정을 통한 공급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각지에서 전개한다.

2018년 이후 목재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염두에 두고 CLT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반적 설계법과 시공방법 보급을 추진하는 등

<sup>51</sup> 주로 자신이 소유한 산림에서 스스로 벌채 등의 작업을 통해 산림 시업(施業)을 수행하고 있는 자.

<sup>52</sup> Cross Laminated Timber의 약자. 직교집성판. 제재판(挽板)을 섬유방향이 직교하도록 적층 접착한 목재 제품.

시에 2017년에 수행된 6만 m<sup>3</sup> 정도의 생산체제 정비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로드맵에 따른 CLT 보급 등을 추진한다.

#### (1)-(다)-㉔ 어업의 지속적 발전

어패류 생산량(식용)은 2015년 362만 톤에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16년에는 321만 5천 톤이 되었다. 수산업은 지금까지 IQ방식<sup>53</sup>의 시험 실시 등 어업자원 관리 고도화, 국산 수산물의 수요 확대 시책, EU를 겨냥한 수산가공시설의 HACCP<sup>54</sup> 인정 가속화, 수익성 높은 조업·생산체제로의 전환, ‘어촌 활력 재생 플랜’의 작성·실현 등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이후 TAC<sup>55</sup>의 적절한 설정과 TAC 등 수량관리 대상어종의 추가에 대한 검토, IQ방식의 시험 실시와 효과 검증을 토대로 한 같은 방식의 단계적 활용 등 어업자원 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업 종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 관리를 수행할 경우의 어업 경영 영향 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수익성 높은 조업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어업경영체 육성으로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업구조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산 수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EU를 겨냥한 HACCP 인정과 시설 정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어촌과 연계한 기업과의 매칭 활동을 촉진하고, 어촌의 소득 향상과 각 어촌의 기능 재편 등을 수행하는 ‘어촌 플랜·광역어촌 플랜’의 수립·실시를 추진한다.

### (라) 지방으로의 인재 환류, 지방 인재 육성, 지방 고용 시책

#### 【시책의 개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권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필요한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도시권에서 발굴하여 지역으로의 환류를 촉진하는 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제도화되어 있는 인재 확보·육성 관련 시책에 대해 역할 분담 및 연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sup>53</sup> Individual Quota 의 약자. 어획가능량을 개별 어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sup>54</su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의 약자. 식품안전을 위한 공정관리 시스템을 말함. 식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미리 분석(Hazard Analysis)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공정을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으로 정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sup>55</sup> Total Allowable Catch 의 약어. 어획가능량.

지역에 인재를 환류하는 한편으로 지역에 활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육성 촉진을 위한 청년고용 시책과 정규직화 등 직장의 매력을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장애인 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 고령화·후계자 문제가 심각한 농림어업의 신규 취업 및 후계자 육성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 기능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청년·여성 등 다양한 인재의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업·조선업·운수업 등이 ‘지역의 지킴이’로서 지속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후계자 확보·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잠재성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래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지키는 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격적 경영’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의 실현을 촉구해 나간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약 10만 명의 인재 환류(2020년까지 5년간 누계)
-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전입을 억제하는 인재 육성과 고용 시책을 통해 약 20만 명의 지방 정착을 도모함(2020년까지 5년간 누계)
-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5년간 누계로 30만 명의 안정된 청년고용 창출을 목표함

● **주요 시책**

**(1)-(라)-① 청년인재 등의 환류 및 육성·정착 지원**

인재 확보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도시권에서 찾아 지역으로 환류하는 체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창출 및 인재 육성·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의 매력 있는 일자리 만들기 와 기존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육성과 정착 등 지역의 창의적 노력을 살린 시책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에 관심이 적은 잠재적 이주층을 대상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방 중소기업 등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취업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계속 실시한다.

**(1)-(라)-②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의 활용 촉진**

각 도부현(道府県. 道都府県 중 도쿄都 제외)에 정비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기관, 지역금융기관, 주식회사 일본인재기구, 인재 비즈니스·관련 민간사업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굴된, 잠재성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격적 경영’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사업 전개를 뒷받침하는 경험 풍부한 프로페셔널 인재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

화된 인재 수요에 기초하여 민간 인재 비즈니스 사업자와 주식회사 일본인재기구 등과 협력하여, 지방에서의 프로페셔널 인재 채용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한다.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은 2016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19,00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2,100건이 넘는 프로페셔널 인재 채용이 실현되었다.

잠재적으로 지방 환류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전문 인력에 대해 다양한 취업 기회와 생활·근로환경 등 지역의 매력을 홍보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지방 환류 가속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지역 대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파견과 겸업 등 다양한 인재 환류 루트를 개척해 나간다. 아울러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기관과 관계부처 시책 간 연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사업 승계 관련 인재 수요의 발굴과 매칭 지원,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경영 인재·전문 인재의 채용 관련 지원을 추진한다.

#### (1)-(라)-㉔ 인재 환류 관련 정책 간 연계 강화

지방으로의 취업·이주 촉진을 위한 각 부처 소관 인재 환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창구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각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 간에도 효과적인 연계가 도모될 수 있도록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인재환류정책 연의회’를 통해 각각의 사업 창구를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해 나간다.

#### (1)-(라)-㉕ 신규 취농·취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농림수산업에 대한 신규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시책 추진, 소득 확보와 기술 습득, 취농·취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상담 등의 지원을 수행해 왔다. 2018년 이후에도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득 확보와 기술 습득 등의 지원을 수행한다. 농림수업을 배우고 있는 고교생에게 취농 의욕을 환기시키고 도전정신을 간직한 농업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졸업자를 배출하기 위해 농림수산고등학교와 농림수산업계 및 관련 산업 등이 연계하여 농업 경영 관련 학습의 충실화 등 실천적 직업교육을 추진한다.

#### ◎(1)-(라)-㉖ 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전원 참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의 취업 촉진과 지역 청년을 위한 안정적 고용 장소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애현역사회’의 실현과 관련된 학습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활동 참가 촉진 및 고령자 취업 촉진, 장애특

성에 대응한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다.

여성의 연령계급별 노동력 비율이 육아기에 낮아지는 이른바 ‘M자 커브’의 저점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양립 지원제도의 보급 등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아 세대(世代)의 여성이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임신·출산하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여성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98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이라고 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을 실시해 간다. 고령자의 경우, 2016년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이 63.6%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령자 고용·취업환경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대응한 취업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실고용률이 착실하게 신장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의 실고용률은 1.92%이다. 2020년까지 실고용률 2.0%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직업안정소(Hellowork)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대응한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과 생활을 모두 상담·지원하는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의 취업 지원과 직장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사회 만들기(마음의 배리어 프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 (2)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 (가)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시책의 개요】

도쿄 일극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적·창의적 노력을 전제로 지역자원과 산업 여건 등을 토대로 지방의 ‘일자리’와 ‘사람’ 간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확보되어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기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도부현(道府県, 道都府県 중 도쿄都 제외)으로부터 조건 정비방안이 첨부된 기관 유치 제안을 받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검증한 후 ‘정부 관계기관 이전 기본 방침’ (2016년 3월22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결정, 이하, ‘이전 기본 방침’이라 함)을 결정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이전 관련 시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 ● 주요 시책

### (2)-(가)-①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는 도쿄권 이외의 도부현(道府県)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6년 3월 ‘이전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23개 연구·연수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0건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중앙 부처의 경우 문화청의 교토 전면 이전 등이 결정되었다. 2016년 9월에는 실증 시험 등의 검토를 거쳐서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향후 시책에 대하여’(2016년 9월 1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결정, 이하 ‘지방 이전 관련 향후 시책’)를 결정하는 등 ‘이전 기본 방침’의 구체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연수기관 등의 지방 이전은 지속적으로 관계자 간 검토를 거쳐 2017년 4월, 5~10년 정도의 연차 계획을 작성·공표하였다. 여기서는 개략적 이전 규모 등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 전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연차 계획에 근거하여 미래 지역 이노베이션 등의 실현을 목표로 착실하게 이전을 추진한다.

중앙 부처·청 중 문화청의 지방 이전을 위해 2017년 4월 교토에 설치한 ‘지역문화 창생본부’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진흥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이전 선행 시책으로서 실시한다. 또한 2017년 7월 문화청 이전 협의회는 ‘신(新) 문화청의 체제 정비와 본격 이전을 향해서’를 결정, 이에 근거하여 본격적 이전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추진한다. 결정의 내용은 ① 본격적 이전 후 교토에 두게 되는 문화청 본청 직원 수는 전체의 70%를 전제로 지역의 협력을 얻어 250명 정도 이상으로 전망함 ② 이전 장소를 현 교토부 경찰본부 본관(교토부가 개조하여 문화청에 임대)으로 함 ③ 늦어도 2021년 중 본격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 등이다. 또한 2017년 6월 개정된 「문화예술기본법」(2001년 법률 제14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진흥뿐 아니라 관광·마을 만들기·국제 교류·복지·교육·산업 및 기타 관련 분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문화청의 기능 강화 및 발본적(拔本的)인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6호)의 개정 법안을 차기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계획적·단계적으로 전면적 이전을 도모한다.

소비자청의 경우, 도쿠시마현의 협력을 받아 2017년 7월 도쿠시마현에 개설된 ‘소비자 행정 신미래 창조 오피스’를 거점으로, 정책의 분석·연구, 실증·실험 등의 프로젝트와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 의한 연수, 도쿠시마를 실증 필드로 하는 상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오피스는 오피스의 상시적 설치와 규모 확대를 향한 테스트로서의 의미도 있으므로 ‘지방 이전 관련 향후 시책’에 근거해 2019년을 목표로 검증·재검토를 수행하

고 결론을 도출한다.

총무성 통계국은 와카야마현에 ‘통계데이터 이·활용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등의 업무를 2018년부터 실시한다. 이외에 특허청은 2017년 7월 오사카부에 설치된 ‘(독)공업 소유권 정보·연수관 긴키(近畿) 총괄본부’에서 긴키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 재산 활동에 관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관광청·기상청은 ‘지방 이전 관련 향후 시책’에 따라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이들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은 지방창생 추진교부금과 지방대학 진흥 등 다른 시책과 연계돼, 앞선 시책이 지역 이노베이션의 진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매년 적절하게 점검 및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이전 기본 방침’ Ⅱ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검증(사회실험)’은 해당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지방에 중앙 부처·청의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설치해 본청 업무 일부를 집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실시할 때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각 부처·청별로 검토해 2017년부터 일부 부처·청에서 시험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각부는 2017년 6월부터 아오모리현과 고치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 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 창생 시책의 아웃리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강화를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2017년도까지 수행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방에서 실시할 필요성 및 효과가 높다고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의 정부 관계 기관 신설은 도쿄권 내 입지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쿄권 외에서의 입지를 원칙으로 한다.

## (나)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 【시책의 개요】

도쿄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양질의 안정적 고용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업 본사 등이 도쿄 23구에 집중되고 있고 채용도 도쿄에서의 일괄 채용이 대부분이다. 지방 기업의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도쿄 23구에서의 본사 기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등을 통한 지방 거점 강화와 기업의 지방 채용 확대를 목표로 관·민 협력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에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고용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에서의 젊은 여성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지방에서 여성 채용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 농업 관련 산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여 지방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쿄에 거주하지 않고 지방에서 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다면, 청년과 여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산업·사회의 주체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등을 통해 강화된 기업 지방거점의 고용자 수를 2020년까지 5년간 4만 명 늘림
- 고용자 수 증가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건수를 7,500건 늘림

### ● 주요 시책

#### (2)-(나)-①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본사 기능의 이전 또는 지방에서의 확충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방 거점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을 개정(2015년 8월 시행)하여 지역재생 계획에 기업 등의 지방 거점 강화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고 본사 기능의 이전 또는 지방에서의 확충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조치 등을 2015년 8월에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고용 촉진 세제와 소득 확대 촉진 세제의 병용을 가능케 하고, 2017년에는 오피스 감세 및 고용 촉진 세제를 확충하고 이전형 사업의 요건 완화를 시행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에 의한 감수(減収) 보전 조치를 확충하였다. 지금까지 44개 도부현(道府県), 51개 지역재생 계획에 대한 인정(認定)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거점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시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세제 등의 목적·내용을 널리 알리고, 본사 기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도도부현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립을 지원해 나간다. 2018년부터는 본사 기능의 이전 또는 지방 확충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종업원 수 증가 등의 고용 요건을 완화하고,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역의 재검토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거점 강화를 더욱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서의 다양한 정규직 사원의 보급·확대를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 채용·등용 등 여성 활약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시책의 실행이 뛰어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여성의 직업생활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2015년 법률 제64호, 이하 「여성활약추진법」)에 근거하여 인정(認定)한다.

## (다) 지방에서의 청년 수학(修學)·취업 촉진

### [시책의 개요]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 진학과 취직 시에 도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적다는 점과 함께 지역 수요에 대응한 고등교육 기관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도쿄도의 대학 진학자 수용력<sup>56</sup>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쿄 23구의 대학생 수가 증가 추세다.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 인구수 약 12만 명(2016년) 가운데, 대학 진학에 따른 전입 초과 인구수는 약 7만 명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학 진학에 따른 도쿄도 전입자는 취직 시에도 잔류 비율이 높다.

청년의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청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의 중핵산업 진흥 및 그 전문 인재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의 특색 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 대학 진흥(반짝반짝 빛나는 지방 대학 만들기)’ 과 도쿄의 대학 정원 억제 및 지방 이전 촉진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쿄권 학생의 UIJ턴에 의한 지방 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실시하는 ‘지방 창생 인턴십’, 지방권과 도쿄권 간 학생 대류(對流)·교류 등을 추진한다.

지방에서 매력적이고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확보를 위해 지역 내 기업(起業)·창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견인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업이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한다.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본사 기능 이전 등에 의한 지방 거점 강화와 고용 확대 및 지방 채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청년의 고향 지역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을 알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어릴 때부터의 직업에 대한 의식 만들기가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우량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연계해 학생 등의 취직 지원, 직업의식 형성 등을 추진한다. 이상의 시책들을 계속적·종합적으로 실시해 나가기 위해, 지역에서의 청년 수학·취업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다음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이 연계·협동하는 추진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며, 향토의 역사와 인물 등을 다룬 지역 교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지역에 자부심을 갖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sup>56</sup> 대학진학자 수용력 = (각 현의 대학 입학정원/각 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의 수) × 100.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방에서 자기 도부현(道府県) 내 대학 진학자 비율을 평균 36%까지 제고(2017년 도부현 평균은 32.7%※속보치)
- 지방의 고용환경 개선을 전제로, 신규 졸업자의 도부현 내 취업 비율을 평균 80%까지 제고(2015년 도부현 평균은 66.1%)
- 지역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건수를 7,800건까지 제고(2015년 6,563건)
- 대학에 있어서, 지역기업 및 관공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율을 2년 전보다 제고(2015년 50.0%)
- 모든 초·중학교 학구에 학교와 지역이 조직적·계속적으로 연계·협동하는 체제 구축
- ‘지방 창생 인턴십’ 참가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를 2배로 늘림(2016년 6,441개, 2017년 7,129개)

● **주요 시책**

(2)-(다)-①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대학 개혁

**지방의 특색 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 진흥**

- 국가의 기본 방침을 토대로 수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산·관·학 연계 추진체제(컨소시엄)를 구축하여 지역의 중핵 산업 진흥과 그 전문인재 육성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 가운데 「지방관 총합전략」에 규정된 것으로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방 창생 우수사업으로 국가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산업 창생을 위한 새로운 교부금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지방대학 간의 역내 연계 뿐 아니라 지방대학과 도쿄권 대학·연구개발법인 간 연계 및 연구력이 우수한 해외 대학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전문직 대학’을 활용하는 이외에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 4년제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쿄의 대학 정원 억제 및 지방 이전 촉진**

- 도쿄의 대학진학자 수용력은 200%로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도쿄 23구의 대학 생 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 인구수 약 12만 명(2016년) 중에 대학진학에 따른 전입 초과가 약 7만 명 정도이며, 특히 도쿄 23구에는 전국 대학생의 18%가 집중되어 있다. 향후 18세 인구의 대폭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성이 높은 도쿄 23구의 대학정원 증가가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 간

대학 편제의 심화와 지역 간 대학 편제의 심화와 경영 악화로 인한 지방 대학의 철폐 등이 발생해 고등 교육의 취학 기회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학진학 시에 도쿄도로 전입한 자가 취업 시에도 도쿄도에 잔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도쿄권 전입 초과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대학생수 증가가 현저한 도쿄 23구에 대해서는 학부·학과의 소재지의 이전 등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대학 정원 증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단, 도쿄의 국제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청년의 도쿄권 전입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대신에 기존 학부를 폐쇄하는 등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사회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우, 이미 시설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수용 정원 증가가 결정·공표되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도쿄권 대학의 지방 위성캠퍼스 설치(폐교사 등의 활용 포함), 지방대학과 도쿄권 대학 간 학점 교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권과 도쿄권을 상호 대류·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 (2)-(다)-㉔ 지식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 강화 플랜

2013년에 5,762건이었던 대학과 지역기업 간 공동 연구 건수가 2015년에는 6,5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지역(지식)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 창생추진사업(COC+)’ (2015년~)의 실시를 통해 복수의 대학들이 지역 활성화의 담당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NPO, 민간단체 등과 협동하여,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대학 졸업자의 지역 정착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의 제3기 중기(中期) 목표기간(2016년~2021년) 중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에 기능 강화의 방향성에 대응한 3가지 중점지원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프레임 중 하나로 지역에 공헌하는 시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수요에 대응한 국립대학 법인의 시설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개혁과 교육·연구개혁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기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상의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는 대학 등의 교육·연구환경 충실화를 도모한다.

### (2)-(다)-③ 학생 지역 정착 촉진 플랜

2014년 평균 32.0%이었던 자신의 출신지 도부현(道府県)대학 진학자 비율은 2017년 32.7%(속보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2012년 평균 71.9%였던 신규 졸업자의 도부현 내 취업 비율은 2015년 66.1%로 저하되고 있다.

지방대학 진학, 지역기업 취업, 도시지역 대학에서 지방기업 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지역산업의 후계자가 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반환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 지원기구의 무이자 장학금에 대한 지방 창생 용도 창설 등이 추진되어 현재 24개 현에서 관련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 나간다.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의 배분과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운용 시에 ‘입학정원 초과 적정화에 관한 기준’의 엄격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도시권에 대한 학생집중을 억제한다.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운용 시의 ‘입학정원 초과 적정화에 관한 기준’ 엄격화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지식)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 창생추진사업(COC+)’ (2015년~)의 실시를 통해 복수의 대학들이 지역 활성화의 담당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기업, NPO, 민간단체 등과 협동하여,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대학 졸업자의 지역 정착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한다.

커뮤니티 스쿨(학교 운영협의회 제도)은 전국 3,600개(2017년 4월 현재, 전년 대비 794개교 증가)의 공립학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을 창생하는 ‘지역·학교 협동 활동’은 전국 1만 635개(2017년 9월 현재, 전년 대비 606개교 증가) 공립 초·중학교에 설치된 ‘지역·학교 협동 본부’가 문부과학성의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 사업’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학교 협동활동’의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학교 간 연락·조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 협동활동 추진원’ (2017년 약 23,000명, 전년 대비 4,900명 증가)과 미실시 지역에서의 활동 추진을 가속화하는 총괄적인 ‘지역·학교 협동활동 추진원’ 등의 배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교육의 추진, 대학 진학 등을 계기로 지역을 떠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인턴십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활동 추진 등과 동시에 지역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 휴업일의 유연한 설정과, 아이의 휴일에 맞춘 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 가족이 지역에서 배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2)-(다)-④ 지역 인재 육성 플랜

2013년 39.6%이었던 대학의 지역기업 및 관공서 연계 교육프로그램 실시율이 2015년 50.0%로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2015년에 창설된 ‘직업 실천력 육성프로그램(BP) 인정 제도’<sup>57</sup>를 충실화하여 지역·지방 창생의 담당 주체인 사회인들의 재학습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지역산업 진흥을 담당하게 될 고도의 전문적 직업인재를 육성하는 고등전문학교, 전수 학교, 전문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인재의 육성에는 직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관계 부처·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고등학교 등에서는 직업능력을 제고하는 질 높은 교육을 충실화하는 동시에 졸업생이 지역기업 등이 요구하는 직업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육성된 인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향상을 도모한다.

고등학교와 지역 간 협동에 의한 지방 창생 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개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2018년 중반까지 결론을 도출한다. 지역산업을 짚어지고 나갈 전문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직 대학’ 및 ‘전문직 단기 대학’의 2019년 개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한다.

대학·고등학교 등에서 ‘지역에 뿌리를 둔 글로벌 리더’의 육성 및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추진하기 위해 관·민 협력에 의한 해외유학 지원제도(‘도약! 유학 JAPAN 일본 대표 프로그램’ 등)의 추진 및 지역 내 유학생 교류를 촉진한다. 특히 2015년에 개시하는 ‘지역 인재 코스’를 통해 ‘지역에 뿌리를 둔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더욱 촉진한다. 또한 각 대학이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에 필요한 스킬인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의 기업 문화 등 커리어 교육’, ‘증장기 인턴십’을 일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창설하는 선행적 시책을 지원한다. 나아가 지역대학과 해외 대학 간 연계·교류를 더욱 촉진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입학자격 취득 가능 교육프로그램(국제 바칼로레아<sup>58</sup>)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여 2020년까지 국제바칼로레아 인정 학교를 200개 이상으로 증가시킨다(2014년 74개교 → 2017년 10월 현재 115개교로 증가).

<sup>57</sup> 대학 등에서 사회인과 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치한 실천적·전문적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sup>58</sup> 국제 바칼로레아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본부 제네바)가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 중 고교생 상당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는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입학 자격(국제 바칼로레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2)-(다)-㉔ '지방 창생 인턴십'의 추진

'지방 창생 인턴십' 참가 학생 수는 2016년 15,118명이었고, 채용기업 수는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688개사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2017년에 작성된 지역 인턴십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요점 정리 자료집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동시에 '지방 창생 인턴십 추진회의'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사회적 분위기를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인턴십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지방 창생 인턴십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형성한다.

## (2)-(다)-㉕ 지역에 매력적인 일자리 만들기 추진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관·민이 일체가 되어 창업 지원 및 창업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起業)·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견인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도록 한다. 그리고 각 도부현(道府縣)의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프로페셔널 인재의 지방 환류를 도모한다. 청년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므로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계자와 연계하여 기업에 의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시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을 수행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 (2)-(다)-㉖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 등에 의한 지방 고용 기회 창출

지방에 매력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지대하지만,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 등이 스스로의 의식을 변화시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 등이 본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향후에도 '지방거점 강화세제'를 통해 대기업의 지방 이전·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 중에는, 채용설명회와 면접 등을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 선발·채용 권한을 지방거점에 위임하고 있는 기업, '근무지 한정 정규직사원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지방에서의 선발·채용 확대는 고향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바람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이는 '도쿄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 활동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

다. 따라서 대기업의 선발·채용에 관한 실태 파악, 좋은 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서 채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2)-(다)-㉔ 지방기업 홍보 기회 제공, 조기 직업의식 형성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제공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유스엘(청년응원) 인정제도’<sup>59</sup> 등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지방에서 희망하는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채용·선발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별로 대학, 국가(공공직업안정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연계하여 지원한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U턴 희망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중고생 등 조기 단계부터 직업의식 형성을 도모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의 매력, 지역기업의 매력 등을 청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시책을 추진한다.

## (라)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시책의 개요]

지방을 모르는 도시지역 아동·학생들이 농산어촌 체험을 통해 초·중·고교의 각 단계에서 지방의 자연·역사·문화 등의 매력에 대해 배우고 이해를 증진할 경우 향후 지방으로 U턴하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정 기간 농산어촌에 머무르면서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아동·학생들도 도시지역 아동·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고향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 활동 추진은 체험 지역의 지방 창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체험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각각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관계 부처·청들이 연계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여름까지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 주요 시책

### (2)-(라)-㉑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농산어촌 체험의 충실화를 위해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원의 부담 경감 등 체험을 보내는 쪽의 문제, 체험 참여 농가의 확보와 체험프로그램의 충실화 등 체험을 받는 쪽의 문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매칭 방법 충실화 등과 같은 공통

<sup>59</sup> 청년 채용·육성에 적극적이고 청년 고용관리 상황 등이 우량한 중소기업을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

문제, 중학생·고교생의 대상 포함, 민간활력을 활용한 지원책 등에 대해 관계 부처·청이 연계하여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지원책의 충실화 및 강화를 위한 검토를 수행한다.

## (마) 지방 이주 추진

### 【시책의 개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 이주에 대한 원스톱 상담 등 지원 시책의 체계적·일체적 추진과 지방 거주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대응한 지방 생활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근 시간이 짧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쉽다는 점, 가까이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이 적더라도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 저렴하고 넓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점, 그 지역의 신선한 농수산물에 의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와 산촌유학 등의 추진, ‘시험적 거주’, ‘2지역 거주’의 추진, 주택 교체 지원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를 검토하는 경우의 ‘시험적 거주’ 등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기회를 갖는 등 대응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주자가 실제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사례를 정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애활약마을’의 실현을 목표로 중·고연령자가 희망에 따라서 지방이나 ‘시내’로 이주하여 지역의 다세대 주민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지역재생법」에 규정된 ‘생애활약마을 형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재생계획의 인정과 관계 부처·청이 참여하는 ‘생애활약마을 형성지원팀’을 통한 기존 제도 상의 문제와 애로, 지원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시책의 보급과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생애활약마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유형화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수집·축적하고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시책의 발굴을 추진한다. 이상의 시책들을 통해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지방으로의 거대한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발본적(拔本的) 시책으로 정보전달 능력이 있는 저명인도 참가한 검토회의 설치 등 지금까지 없었던 지방 생활의 매력 알리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UJ턴 시책의 발본적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2018년 여름까지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연간 이주 알선건수 11,000건(2016년 약 6,800건)
- ‘시험적 거주’ 제도를 도입하는 시정촌의 수를 2014년 대비 2배 늘림(2014년 23%, 2017년 39%의 시정촌에서 실시함)
-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인구 1,300만 명(2016년 1,126만 명)
- ‘생애활약마을’ 구상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 100개 단체
- ‘지역살리기 협력대’ 4,000명(2016년 4,090명)

## ● 주요 시책

### (2)-(마)-① 지방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체제

2016년도의 ‘이주·교류 정보 가든’ 알선 건수는 약 6,800건이었다.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자리·주택·생활환경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주 관련 정보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이주 네비게이션’을 2015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였으며(2016년에 약 240만 페이지 뷰 달성), 지방자치단체 프로모션 동영상과 로컬 홈페이지의 전국 콘테스트와 ‘이주 체험담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주·교류 정보 가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청이 직접 수도권 거주자에게 지역의 매력과 이주 관련 정보를 각 어필하는 이주 상담회와 세미나 등을 2016년에 연간 약 200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지방으로의 이주·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이주 페어’를 실시하는 등 지방 이주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에 대해 2015년부터 지방재정조치를 창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주에 관한 상담수요 및 이용자의 요망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주·교류 정보 가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청이 연계한 활동과 야간세미나 등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 이주에 대한 흥미·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주 페어’의 실시 등을 통하여, 이주 관련 정보의 제공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 (2)-(마)-② 지방 거주 본격 추진(도시·농촌 교류, ‘시험적 거주’·‘2지역 거주’의 본격 추진, 주택 교체 지원)

‘시험적 거주’를 도입하고 있는 시정촌의 수는 2014년 23%에서 2017년에 39%가 되었고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인구는 2016년에 1,126만 명이 되었다. 2015년 5월, 지방 거주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제고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산·관·학·금·노·언 기타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민간 유지들의 주도에 의하여 “그렇다, 지방에서 살자!” 국민회의가 설치되어 각각의 입장에서 지방 거주 추진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부현(道府県) 단계에서도 유사한 회의의 설치가 추진되어 현재까지 27개 도부현에서 활동 중이다.

지방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체험과 농산어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제(농박, 農泊)를 포함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 활동을 농산어촌의 소득·고용 확보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시적 체재에서 계속적 체제로, 이주·정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광·교육·복지·농업의 각 분야에서 연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증가가 전망되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도 포함하여 농산 어촌 여행자의 대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지역 만들기의 조타수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인 DMO 및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로서 실시 가능한 체제 정비를 도모한다.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등 시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법률 제127호)을 2015년 5월에 전면 시행하였으며, 국가의 기본 지침을 책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주 체험, 이주자에 대한 취업·주거 지원 등에 대해 2015년부터 지방재정조치를 창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지속적으로 지방 거주 의 분위기 양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를 위한 각 분야별 연계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2지역 거주’의 추진과 주택교체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구정촌에 의한 ‘빈집 등 시책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보를 집약하여 전국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액세스·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전국판 빈집·빈터 은행’의 구축·활용, 빈집을 포함한 기존 주택의 유통 촉진,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새로운 주택 안전망 제도에 의한 이주자 대상 임대주택 개수(改修)지원<sup>60</sup>, 지방 이주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주택대출 금리인하<sup>61</sup>, LCC<sup>62</sup>의 진입 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지방으로의 거대한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발본적(拔本的) 시책으로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일반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정보 전달력이 있는 저명인도 참가하는 검토회의의 설치 등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방 생활 매력 알리기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일부 도도부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향 기업 취업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고교 졸업생 및 보호자에 대한 취업 안내 발송, 복수의 현이 합동으로 도쿄권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향취업 설명회 개최, 도쿄권에서 UIJ턴한 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국가로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와 인재소개회사 등 폭넓은 관계자와의 연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2)-(마)-㉓ 이주·점주 시책 우수사례 전국 확산**

행정·민간에 의한 지역산업 진흥, 이주자 유치 후원, 현외(県外)로부터의 중·고교생 유치 등의 시책을 통해 이주자가 실제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sup>60</sup>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공급촉진계획’에서 이주자를 주택확보요배려자(住宅確保要配慮者)로 자리매김 필요.  
<sup>61</sup> 지방 이주자의 주택취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금융지원기구와 협정 체결 필요.  
<sup>62</sup> Low Cost Carrier의 약어. 저비용·고빈도 운항을 통해 저운임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함.

이러한 지역의 행정·민간 활동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우수사례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 (2)-(마)-④ ‘생애활약마을’ 추진

‘생애활약마을’은 중·고연령자가 희망에 따라 지방이나 ‘시내’로 이주하여 지역의 다세대 주민과 교류하면서 평생학습·취업·자원봉사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의료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시책이다. 지금까지 「지역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활약마을 형성사업’이 포함된 지역재생계획이 17개 인정되었으며, 120개 사업의 교부금 계획이 인정되었다. 또한 관계 부처·청이 참가하는 ‘생애활약마을 형성 지원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찰과 의견 청취를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와 애로, 지원책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책의 보급과 전국적 전개를 도모하는 등 ‘생애활약마을’의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생애활약마을’ 제도의 홍보 강화 및 추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에 작성된 ‘생애활약마을’에 관한 매뉴얼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구모임 실시와, 전문가 등의 참여하여 수행되는 현지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유형화하고, 유형별 수법과 문제해결 사례 등의 정보 및 노하우를 수집·축적한다. 이와 함께 금년에 실시한 ‘생애활약마을’에 관한 의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책 추진의 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시책의 발굴을 추진한다.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에서 점검 및 보완을 시행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2)-(마)-⑤ ‘지역살리기 협력대’의 확충

2016년 ‘지역살리기 협력대’ 대원 수는 4,090명(이 중 구(旧) 농촌근로대원 112명)으로서 2013년 대비 약 4.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와 지역특산물 개발·판매·PR 등과 같은 지역 활성화 지원과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 생활 지원 등의 지역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원의 약 60%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대원의 약 30%는 스스로 창업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살리기 협력대’의 확충을 위해 잡지 광고, WEB 콘텐츠 등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원 대상 연수의 충실화, 대원의 창업·사업화 지원 충실화, ‘지역살리기 협력

대' 서포트 데스크 개설, '지역살리기 협력대' 전국 서밋(Summit) 개최 등을 수행하였다. 지속적인 대원 확보를 위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전직(転職)을 희망하는 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원들의 활동 내용 향상과 지역 정주·정착 촉진을 위해 지역의 대원 맞이 및 서포트 체제 정비, '지역살리기 협력대' 서포트 데스크에 의한 지원, 대원·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한 연수 충실화, 대원들의 창업·사업화 지원, 전국 서밋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 (2)-(마)-⑥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및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인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지역 외 사람들과의 교류창구를 증대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사람·정보'의 흐름을 창출하는 '첼린지 고향 워크(work)'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지역 만들기 관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의욕을 가진 지역 외 사람들과의 협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비롯하여 '새틀라이트 오피스 매칭 지원사업'<sup>63</sup>, '고향 워킹 홀리데이'<sup>64</sup>를 추진한다. 어린이의 도시·농산어촌 교류 확대·정착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이주·교류 정보 가든' 등을 활용하여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2)-(마)-⑦ 지방 생활의 매력 알리기

지방 생활의 매력 알리기는 2017년 2월에 개최된 “그렇다, 지방에서 살자!” 국민회의에서 '생활 양식의 재검토'를 테마로 지방 이주 경험자의 강연 이외에 지방 생활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도교와 지방의 통근시간, 생활비, 주택 면적, 육아환경 등을 비교한 것)가 제시되었다. 입학·취업·인사이드 등에 의하여 사람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특히 2월·3월에 집중적으로 매스 미디어 활용, 홈페이지, SNS에 의한 정보 알리기 실시 등 효과적·전략적 홍보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그렇다, 지방에서 살자!” 국민회의 등의 각종 이벤트 중에서 테마로 다루어졌거나 이주자 증가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 매력 재발견,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향토에 대한 자부심·애착' 양성 등의 시책 정보를 널리 알린다.

<sup>63</sup> 새틀라이트 오피스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기업의 수요조사 실시와 동시에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sup>64</sup> 도시지역의 청년 등이 일정기간 지방에 체재하면서 일과 지역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사업.

### (3)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 (가) 저출산 시책의 '지역 어프로치' 추진

##### 【시책의 개요】

지역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다르고<sup>65</sup>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지표들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저하의 요인인 '만혼화·만산화(晩産化)'의 상황과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일하는 방식', '소득', 그리고 '지역·가족의 지원력'에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시책은 국가 전체적인 시책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위해서는 지방의 시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책도 병행하여 전개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지역 저출산 및 일하는 방식 지표' (2015년 10월에 제1판, 2016년 2월에 제2판, 2017년 5월에 제3판), '지역 저출산 시책 검토를 위한 지침' (2016년 2월에 제1판, 2017년 5월에 제2판)을 공표한 바 있다. 향후에는 지표와 지침의 충실화와 동시에 선구적이고 우량한 지역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시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노사단체 등의 지역관계자로 구성된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일체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첫째 자녀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 취업률을 55%로 향상(2015년 53.1%)
-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13%로 향상(2016년 3.16%)
- 주간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자 비율을 5%로 저감(2016년 7.7%)

#### ● 주요 시책

##### (3)-(가)-①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의 대응 지원, 선구적이고 우수한 시책의 전국적 확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노사단체, 금융기관 등의 지역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일과 육아·복지 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장시간 노동의 시정, 여성 활약 추진 등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의 요구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팀'이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지방관 총합전략」의 개정 및 구체적인 시책 실시로 이어

<sup>65</sup> 2008년~2012년 시정촌(특별구 포함)별 출산율을 보면, 1.80 이상이 120개 단체(그 가운데 27개 단체는 2.00 이상), 1.00 미만인 12개 단체임(후생노동성 '2008~2012년 인구동태보건소·시구정촌별 통계'에 의한 공표치(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를 집계한 것).

지게 한다. 이를 검토할 때 지역의 출산율에 관한 상황과 이에 큰 영향을 주는 ‘일하는 방식’의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지역별로 제시하는 ‘지역 저출산화 및 일하는 방식 지표’, 지표를 활용한 분석과 대응책의 검토 사례 등을 정리한 ‘지역 저출산 시책 검토를 위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활용 상황 등을 토대로 개정하여 제공한다. 동시에 각 지역의 특징적인 시책과 실무적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를 설정하고 선구적이고 우수한 지역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각 지역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해 선진적인 시책의 실시·보급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포괄적 지원’, 육아하기 쉬운 기업 환경 정비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지원 등을 수행하는 ‘아웃리치 지원’, 한부모 가정과 청년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에서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갖춘 취업·자립을 지원하는 ‘지방 취업·자립 지원’ 등의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도쿄권에 거주하는 지방 출신 학생 등의 지방 환류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지방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도쿄권으로 청년 전출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서의 인턴십 실시 등을 지원하는 ‘지방 창생 인턴십’을 산·관·학 협력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 취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의 보급·활용 강화 및 ‘근무지 한정 정규직 사원’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선구적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팀’에서 결정한 지방 창생추진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 시책 사례(모델사업)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 개혁’의 추진을 지원한다.

### (3)-(가)-② ‘저출산사회시책 대강(大綱)’과 연계한 결혼·임신·출산·육아의 각 단계에 대응한 종합적 저출산 시책 추진

청년 세대의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사회 시책 기본법」(2003년 법률 제133호)에 근거하여 책정된 ‘저출산 사회 시책 대강’(2015년 3월 20일 각의 결정)과 연계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의 각 단계별 저출산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

##### 【시책의 개요】

독신 남녀의 약 90%는 결혼 의사가 있으며, 희망하는 자녀의 수도 2명 정도이다. 그러나 미혼율은 상승하고 있고 부부의 자녀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로,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결혼이 실현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고용 불안정성과 저소득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년 고용 시책은 고용 여건이 나쁜 지역에서의 고용·실업 시책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에 수반되는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세대가 희망하는 대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소득 수준(예를 들어 독신은 연간 300만 엔, 부부는 연간 500만 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이 필요하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청년(20~34세) 취업률을 79%로 향상(2016년 77.7%)
- 청년 세대의 정규직(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비율에 대해 전체 세대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함(2016년 15~34세의 정규직 비율 94.3%, 전체 세대의 정규직 비율 94.5%)
- 프리터(freeter) 수를 124만 명으로 감소(2016년 155만 명)

**● 주요 시책**

**(3)-(나)-① 청년·비정규직 고용 시책 추진**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여건에 관한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청년고용 시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법」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졸업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프리터 등의 정규직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016년 1월에 ‘정사원 전환 및 대우 개선 실현 플랜(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같은 해 3월까지 도도부현별로 산업구조 등의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플랜’을 책정한 바 있다. 이들에 근거하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다) 출산·육아 지원**

**【시책의 개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혼·임신·출산·육아의 각 단계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 휴가 중의 부담 경감과 산후 케어를 비롯하여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의 지역 간 편차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주산기(周産期) 의료 체제 확보가 중요하다. 희망하는 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유로 육아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드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의 경감도 중요하다.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세대(世代) 포괄 지원 센터’의 전국적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육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2015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에 따라 유아 교육·보육, 지역 육아 지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육아 세대를 응원하고 사회보장을 전 세대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유아 교육의 무상화(無償化)를 가속화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3~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보육원·인정어린이집의 비용을 무상화한다. 0~2세 유아가 90%를 차지하는 대기(待機) 아동과 3~5세 아동 모두, 대기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문제이다.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 플랜’을 앞당겨 2020년까지 32만 명분의 보육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기 아동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상의 시책들과 병행하여 0~2세 유아에 대해서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당분간 무상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제2 자녀 이후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모든 어린이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모든 육아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관련 시설·사업의 계획적인 준비를 도모한다. 지역별 산부인과 의사 수 지역별 검증과 지역 편제 시정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 의사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한편 산부인과 진료소 근무 의사의 고령화로 이직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주산기 의료 제공 체제 확보도 도모해야 한다.

방과 후 아동 시책으로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초1의 벽’ 타파를 위해 ‘방과 후 어린이 종합 플랜’에 근거해 일체형을 중심으로 한 ‘방과 후 아동 클럽’과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의 계획적 준비를 추진한다. 또 2018년 말까지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추가적 시설 준비를 앞당겨 실시하고, 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방과 후 아동 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원 수요가 높은 임신부에 대한 지원 실시 비율: 100%
-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대기 아동 해소를 목표로 함(대기 아동 수 2017년 4월 현재 26,081명)
-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어린이 교실’에 대해 모든 초등학교 학구(약 2만 개소)에서 일체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실시하며, 1만 개소 이상을 일체형으로 함.
- 3세대 동거 또는 근거(近居)의 희망 대비 실현 비율 향상(2014년 72.6%)
- 바라는 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유로 ‘육아와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를 드는 사람의 비율 줄이기(2010년 60.4%, 2015년 56.3%)

## ● 주요 시책

### (3)-(다)-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절 없는 지원(‘육아 세대 포괄지원센터’ 정비, 주산기 의료 제공 체제 확보)

현재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걸친 지원은 각종 기관에 의해 ‘부처 간 칸막이’ 형태로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육아 세대(世代)를 지원하는 원스톱 거점의 정비를 추진하고 전문직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단절 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상담 등을 통한 평가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플랜의 책정 등을 실시한다.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종합적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거점(‘육아 세대 포괄지원센터’)의 정비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건사 등의 전문직이 모든 임신부 등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플랜을 작성함으로써 임신부 등에 대한 단절 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는 ‘육아 세대 포괄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2017년 8월에 책정한 지원대상자 평가 및 지원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소아 의료와 주산기 의료 확보, 지역의 조산사 활용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주산기 의료 제공 체제 확보를 위해 무(無)산부인과 2차 의료권의 해소를 비롯하여 산부인과 의사 육성·증가 시책, 산부인과 의사 지역 편재 개선 시책, 지역 산부인과병원 기간화(基幹化), 임신부 건강진단시설과 분만시설 간 연계 강화, 중핵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산부인과 부족 지역으로 의사 파견 지원, 지역의 분만 취급시설 확보 등의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 조산사에 대해서는 조산사의 취업장소 편재를 시정하는 시책과 정상 임신·정상 분만 시의 조산사 활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원 내 보육, 야간 보육, 환아 보육, 복직 지원 등의 충실화 등을 통해 여의사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확보해 나간다.

이상의 시책들을 통하여, 2020년까지는 지원 요구가 높은 임신부에 대한 지원책 실시 비율이 100%가 되도록 한다.

### (3)-(다)-② 어린이·육아 지원 강화

부부가 바라는 자녀의 수는 2.32명인 반면 평균 출생 자녀수는 1.94명에 그치고 있다. 바라는 만큼의 자녀수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학교 교육비를 드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모와 동거·근거(近居)하고 있는 부부

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들보다도 출생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육아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육아지원 신(新)제도’를 실시하여, 유아 교육·보육 및 육아지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일본 1억 총 활약플랜’에 근거하여 치우 개선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육아안심플랜’에 의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대기(待機) 아동을 해소한다(2017년 4월 26,081명). 육아 세대(世代)를 응원하고 사회보장을 전(全)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 무상화(無償化)를 가속화한다. 이에 더하여, ‘3세대 동거·근거’의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2020년까지는 ‘3세대 동거·근거’의 희망 대비 실현 비율을 향상시키고, 바라는 만큼의 자녀수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드는 사람의 비율을 저하시킨다.

방과 후 아동 시책으로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후에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초1의 벽’을 타파하기 위해 ‘방과 후 어린이 총합플랜’에 근거하여, 일체형을 중심으로 한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어린이교실’의 계획적 정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 후 아동클럽’의 추가적인 정비를 2018년 말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또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한 방과 후 아동 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라) 지역 실정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워크 라이프 밸런스 실현 등)

### [시책의 개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육아 세대의 남성은 노동 시간이 길고 육아 휴직과 연차 유급 휴가의 취득률이 낮다. 육아 세대의 남성들이 가사·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은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전근 등의 일하는 방식, 육아 휴직의 낮은 사용률, 남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 존재 등이 임신·출산·육아 휴직 취득 등을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 등 여성에 대한 갖가지 해리스먼트(harassment) 문제와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여전히 여성들은 일과 육아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육아 세대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의 커리어패스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녀를 불문하고 일과 복지의 양립이 문제로 작용하지만, 육아의 시기와 부모의 복지 시기와 겹쳐서 육아 부담뿐 아니라 복지 부담까지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저해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곤란하게 하여 저출산, 여성의 커리어 형성 방해, 남성의 가정 참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11월에 「과로사 등 방지시책 추진법」(2014년 법률 제100호)이 시행되었고, 2015년 7월에 「과로사 등의 방지시책에 관한 대강(大綱)」이 각의 결정되는 등 장시간 노동 삭감 시책의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 (2017년 3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 결정)에서는 별칙이 포함된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 시책의 ‘지역 어프로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노동자 확보 등 기업에도 도움이 되며, 양호한 고용 기회 창출,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효용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고 채용·배치·육성 등 모든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를 시정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여 육아 및 복지에 관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청년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 여성과 고령자 등 다양한 노동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간다는 관점에서서도 중요하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첫째 자녀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 취업률을 55%로 향상(2015년 53.1%) (다른 시책 분야의 지표와 중복)
-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13%로 향상(2016년 3.16%) (다른 시책 분야의 지표와 중복)
- 주간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자 비율을 5%로 저감(2016년 7.7%) (다른 시책 분야의 지표와 중복)
-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을 70%로 향상(2015년 48.7%)

## ● 주요 시책

### (3)-(가)-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노동자가 일과 육아·복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에 개정된 「육아 휴직, 개호(介護)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6호)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을 최장 2세까지 연장, 육아 휴직 제도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육아 목적 휴가 창설 노력의무의 착실한 시행을 추진한다. 육아 휴직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확충과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 촉진 등을 도모한다. 기업별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시각화를 추진하여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추진하는 기업이 선택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 일과 육아·복지 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시책을 추진하고, 종업원의 자녀수가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역의 선구적이고 우수한 대응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한다.

「여성활약 추진법」 및 「여성활약 추진을 위한 공공조달 및 보조금 활용에 관한 대응지침」(2016년 3월 22일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제작본부 결정)에 입각하여 국가가 가격 이외의 요소를 평가하는 조달(종합평가낙찰방식·기획경쟁방식)을 실시할 때는 에루보시(별 연기)인정<sup>66</sup> 등을 취득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기업에 가점을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에서도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 (3)-(라)-㉔ 장시간 노동의 개선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와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책 등 과잉노동 방지를 위한 시책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한다.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본부’(본부장: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장시간 노동 삭감시책 추진 강화와 함께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된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본부’를 통해 도도부현의 실정을 반영한 장시간 노동 억제,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 외 노동시간 삭감’ 및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리딩 컴퍼니 CEO에게 실시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업의 선진적인 추진 사례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 및 쉬는 방식 개선 컨설팅트’ 등에 의한 기업 지원 등을 전개해 나간다.

연차유급휴가는 완전 소진을 목표로 10월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의 행사와 연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지역 특성을 살린 휴가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플러스 원 휴가 캠페인’(3일 이상 연휴가 집중되어 있는 가을을 중심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조합하여 4일 이상 연휴 실시)을 제창한다. 이상의 시책들을 통하여 장시간 노동의 억제,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 (3)-(라)-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하는 방식’ 보급·촉진

근무에서는 근무지와 직무를 한정된 고용이 보급되어 있어서 본인의 뜻에 반하는 전근은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참고로 근무지와 직무 등을 한정된 ‘다양한 정규 직사원’ 제도의 도입·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2017년 3월에 책정한 ‘전근에 관한 고용관리의 힌트와 수법’을 주지시킨다. 또한 플렉스 타임제의 보급·촉진, 노무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지 등을 통한 재택근무, 새틀라이트 오피스 근무 등의 텔레워크 도입

<sup>66</sup> 여성활약 추진 상황이 우수한 기업은 「여성활약 추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인정(認定)을 받을 수 있음.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인정마크(에칭 ‘에루보시(별 연기)’)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에서의 가점평가와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리 융자의 대상이 됨.

촉진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하는 방식’ 을 보급·촉진한다.

### (3)-(라)-④ 지역에서의 여성 활약 추진

25~44세 여성 취업률은 69.5%(2013년)에서 72.7%(2016년)로, 민간기업의 과장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2013년)에서 10.3%(2016년)로, 도도부현 본청 과장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2015년)에서 9.3%(2016년)로 각각 상승하였다.

‘지역 여성활약 추진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단체, 금융기관, 기타 다양한 단체에 의한 연계체제 구축과 원스톱 지원체제 정비(예: 취업, 기업(起業)·창업, 육아 지원, 교육, 복지 등 필요한 사람에게 범분야적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등 지역이 하나가 되어 여성활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Mother’s Hello Work(어머니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의 직업상담·직업소개 등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저리용자제도와 ‘창업스쿨’ 내 여성창업가코스 설치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임원 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 내 여성 활약 상황의 ‘시각화(visualization)’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시책에 추가하여 「여성활약 추진법」의 ‘시각화 사이트’와 여성 활약 추진기업 데이터베이스의 충실화 등을 통해 여성 활약 상황에 관한 정보의 시각화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활약 추진법」에 근거한 추진계획 수립과 협의회 설치 등을 촉진하고, 지역에서의 여성 활약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활용하여 여성활약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여성활약 가속화를 위한 중점방침’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서 여성이 일하는 장소 확보, 여성 창업 지원, 지금까지 여성의 활약이 적었던 분야에서의 활약 추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평가 시책 등을 국가와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착실하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에도 실시를 독려하여 여성활약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사회참여 역시 추진한다.

### (3)-(라)-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장시간 노동 개선, 다양한 ‘일하는 방식’ 추진, 지역에서의 여성 활약 추진, 청년·비정규직 고용 시책 추진 등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해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지역 일하는 방식 지원팀’에서 이를 지원한다. 각 지역에서의 특징적인 시책과 실무적 문제에 대해 정보교환을 수행하는 장소를 설정하고,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3)-(아)-1 참조).

## (4)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 (가) 마을 만들기·지역 연계

#### A. 마을 만들기에서의 지역 연계 추진

##### 【시책의 개요】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계속돼 지역경제 축소, 생활 편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인구 유출에 제동을 걸고, 활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연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 20만 명 이상 시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견인, 고차 도시 기능의 집적·강화, 향상된 생활 관련 기능·서비스를 구비한 연계중추도시권을 새롭게 형성하여,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일정한 인구를 확보하고 활력 있는 사회·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계중추도시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와 행정 서비스, 생활 기반 등의 측면뿐 아니라 경제·고용 및 도시 구조도 고려한 연계를 구축한다. 단 새로운 도시권의 형성은 지방의 자주성에 근거한다는 점을 존중한다. 또한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를 중심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정촌이 연계해 권역의 생활 관련 기능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인구의 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주자립권 시책이 2009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정주자립권의 추진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새로운 권역 형성을 촉진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갖는 지역들이 연계하여 새로운 돈벌이 역량과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광역 지방 계획(2016년 3월, 국토교통 대신 결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 연계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매력적인 도시 권역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선진성,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 청년들이 끌어들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역권 단위에서 인구의 집적 거점이 되어 청년들이 원하는 매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구 및 도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권의 인구 동태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청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책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창생을 목표로 도쿄 23구와 전국 각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하고, 주민 간 상호 이해 및 교류를 도모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수: 30개 권역을 목표로 함(2017년 10월 현재 23개 권역)

### ● 주요 시책

#### (4)-(가)-A-①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연계중추도시권의 연계 수법으로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에서 규정하는 ‘연계협약’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타 개별 법률 및 시책들을 활용한다. 2017년 10월 현재

23개의 연계중추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다.

의욕을 가진 시정촌들이 적극적으로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지방재정조치와 위탁사업, 각 지역의 선진적 지역 연계 추진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RESAS와 메시 단위 인구 추계 등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보조사업 채택 시 배려 등의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생활권 형성을 후원한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2020년까지 연계중추도시권수를 30개 권역으로 확대함을 목표로 설정한다. 권역 내 시정촌들은 국가의 「총합전략」을 참고로 하여 도시권의 특성을 토대로 지역경제, 고차 도시 기능 및 생활 관련 기능에 관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여 진척 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4)-(가)-A-②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2017년 10월 현재, 119개 권역에서 정주자립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관련 기능에 관한 서비스공급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정주자립권 형성을 위해 세미나 개최를 통해 추진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중심시를 대상으로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까지 정주자립권 협정 체결 권역수를 140개 권역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는 권역의 특성을 토대로 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구체적 시책에 관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여 진척 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4)-(가)-A-③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연계에 의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추진

광역지방계획(2016년 3월 국토교통대신 결정)을 보면 8개 광역권에서 총 116개의 광역연계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다. 각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민의 폭넓은 주체들이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로 13개 광역연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사례 형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구적인 사례 형성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른 사례에 응용함으로써 각 권역별 프로젝트의 조기 구체화를 도모하고,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광역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 (4)-(가)-A-④ 도쿄 23구와 전국 각 지역과의 연계 추진

도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시에 지역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여 지역 특산품의 판로 개척 등 산업 진흥과 관광 진흥 등을 도모한다. 도쿄 23구에서 각 지역의 매력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지역별 체험 투어를 실시하는 등 도쿄 23구와 전국 지역 간 연계 시책을 추진한다.

## B.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추진

### 【시책의 개요】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경제 활동 기반인 ‘마을’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 향상 및 방문자·체류자 증가를 통한 수익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단체의 재원 확보를 시작으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추진 방식 구체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기반 강화 및 전국적 전개를 도모해 나간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중간보고’에 근거하여 프리라이더(Free-rider,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회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자)의 출현을 방지하여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단체의 재원 확보를 돕는 한편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추진 방식에 대해 법제화를 포함한 제도화 추진

## ● 주요 시책

### (4)-(가)-B-①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추진

(4)-(가)-E-① 관·민 연계 및 시각화 추진과 연동하여 국내외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기반 강화 및 전국적 확산을 도모한다.

2016년 6월에 ‘일본판 BID<sup>67</sup>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추진 방식 검토회’가 BID를 포함하여 해외의 선진 사례와 국내의 추진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역할과 문제 등을 정리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중간보고에 근거하여 프리라이더(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회비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자)의 출현을 방지하여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단체의 재원 확보를 돕는 한편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추진 방식에 대해 필요한 법제를 제도화한다.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해 다음의 지원 시책을 실시한다.

1. 공공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마을 활력 창출을 위해 ‘공모 설치·관리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민간자금 등에 의한 공원의 재생·활성화와 녹지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sup>67</sup>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약어. 미국·영국 등의 제도로 주로 상업지역에서 지역 내 자산소유자·사업자가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정한 것임.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재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한 광고물 게시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광고의 게시를 허가하는 등 규제를 탄력화하고, 경관을 배려한 광고 게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계획·지구계획 등 경관·도시풍경과 관련된 규칙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여 광고에 의한 사업수입 증가를 도모한다. 민간단체와의 연계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경관 계획과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의 책정을 촉구한다.
3.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면서 빈 점포, 오래된 민가 등 유휴자산의 리노베이션 등을 수행하는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쇄적 추진을 위해 민간도시개발 추진기구가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설립하는 펀드를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4.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단체의 보급·계발사업과 실증 실험 등(‘도시편리성 증진협정’ 등에 근거한 광장 정비, 통로 포장의 고품질화 등)에 대해 지원한다.

### C.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연계

#### 【시책의 개요】

많은 지방도시에서는 지금까지 교외 개발 진행에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확산된 시가지의 밀도가 저하되면서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협력하에 의료·복지·상업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과 주거 유도를 통한 도시의 콤팩트화와 대중교통망의 재구축을 비롯한 주변의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와 육아 세대(世代)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실현, 액세스 개선과 마을의 회유성(回遊性) 향상을 통한 생활 편리성 유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면·경제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영 등을 관련 시책들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또한 도시의 콤팩트화는 인구밀도의 상승을 통해 ‘밀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산업 등 도시 내 제반 활동의 생산성 혁명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지역의 ‘돈벌이 역량’ 향상 관련 시책들과도 연계한다.

많은 도시들에서 빈터·빈집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하여 도시구조가 저밀도화하는 ‘도시의 스펀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스펀지화는 주거 및 도시기능의 유도·집약을 위한 시책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콤팩트시티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빈터 등의 적정 관리와 유효 활용,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금·노하우를 활용하여 노후화 및 확산되어 있는 공공·공익시설의 갱신·재편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시정촌수 : 300개 시정촌(2017년 7월 말 현재 112개 도시)
- 입지적정화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시설로서, 시정촌 전역에 존재하는 유도시설 수에 대해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 입지하는 유도시설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의 수: 100개 시정촌
- 시정촌 전체 인구에 대해 거주유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 수 : 100개 시정촌
- 대중교통 편리성이 높은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비율  
(3대 도시권) 90.8%(2016년 90.9%)  
(지방중추도시권) 81.7%(2016년 79.3%)  
(지방도시권) 41.6%(2016년 38.9%)
- ‘지역 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인정(認定) 건수 : 100건(2017년 10월 말 현재 21건)

**● 주요 시책****(4)-(가)-C-①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연계**

도시의 콤팩트화와 대중교통망의 재구축을 비롯한 주변 등에서의 교통 네트워크 형성은 다음의 행정 목적 실현을 향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서,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복지·상업 등의 생활서비스 시설 유지 및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고령자와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형성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및 행정서비스 효율화 등에 의한 행정비용 감축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입지적정화계획제도,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제도와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92호)에 의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제도를 연계하면서, 그 주지(周知)·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콤팩트시티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추진 시에는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재편,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 의료·복지, 중심시가지 활성화, 빈집 시책 추진 등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 시책들과의 정합성과 상승(相乘)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5년 3월에 설치된 ‘콤팩트시티 형성 지원팀’ (사무국: 국토교통성)의 프레임을 통

해서 시정촌의 대응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도 시정촌의 문제·수요에 적합한 지원 시책의 충실화, 콤팩트시티 관련 지원 조치를 일람할 수 있는 지원 시책집의 정보 제공, 시범도시 등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 추진,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표 개발·제공 등 상당한 진척이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촌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활용하면서 콤팩트시티 형성을 통한 생활 편리성 유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발현시키기 위해 다음 시책을 추진한다.

- 입지적정화계획,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청이 연계한 컨설팅과 지원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시책의 저변을 확대한다.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시정촌수 관련 평가 지표 : 150 시정촌 → 300 시정촌)
- 건강과 경제 효과 등에 관한 지표의 개발·제공을 통해 시정촌이 추진하는 성과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효과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청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원 메뉴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사람의 이동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유저의 눈높이에서 최적 시설 배치 방법 등의 개발과 대중교통의 편리성 향상을 추진한다.
- 도시기능의 고도화, 도시 활동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AI)·IoT 등의 선진적 기술을 마을 만들기 분야에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빈터 등의 저·미이용지를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이들을 공간자원으로서 유효하게 이·활용함으로써 활력·교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구역 전체의 가치 향상으로 연결하는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 이·활용 및 집약 재편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관리 추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민간도시개발사업과 일체화된 공공·공익시설의 갱신·재편 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평준화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 효율적이고 편리성 높은 지역 대중교통망의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와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에 관한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도모함으로써 도시활력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대중교통망의 형성을 촉진한다. 동시에 전국의 대중교통기관을 망라한 경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이용이 가능한 교통계 IC카드의 보급·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다.

- 인구 감소,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도시에서 도시의 콤팩트화, 거점지역의 형성을 도모하고 관·민연계의 추진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돈 벌이 역량’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지방재생 콤팩트시티’ (가칭)를 30개 정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공동화가 진행된 중심시가지의 거점 빌딩 등의 재생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재생 사례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시책 소개 등을 수행하는 상담 창구를 정비한다.

#### D.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 【시책의 개요】

지방도시에서 지역의 ‘돈 벌이 역량’ 과 ‘지역 가치’ 의 향상을 도모하는 ‘돈 버는 마을 만들기’ 를 추진하여 마을에 활력을 창출하고 민간투자의 환기 및 소득·고용의 증가로 연결되게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애착의 양성을 도모하는 시책과 함께 빈 점포 등 유휴자산의 재생·활용 등을 통해 수익력을 높이는 지역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매력 있고 파급효과가 높은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는 민간프로젝트의 수 : 60건(2017년 7월 현재 11건)

#### ● 주요 시책

##### (4)-(가)-D-①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지방도시 거점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의 흥청거림’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임팩트·파급효과가 높은 민간투자의 환기를 도모하는 등 상업·문화·교육·의료·복지·주거 등의 복합적인 기능 정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정한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집적함에 따른 ‘밀도의 경제’ 를 ‘돈 벌이 역량’ 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수요 흡수, 고령자 등의 건강·장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청년·창업자의 챌린지에 의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회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공공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의 경영 안정과 같은 소프트 시책과 콤팩트시티의 형성과 같은 하드 시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돈 벌이 역량’ 과 ‘지역 가치’ 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청이 하나가 되어 책정한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앞으로도 개정하는 동시에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시책 사례집인 ‘지역의 웰린지 100’, ‘로컬판 지적대류거점 만들기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돈 버는 마을 만들기’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한다.

지역의 ‘돈벌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희자산의 유효 활용이 필요하므로 빈 점포, 빈집, 오래된 민가 등의 지역 유희자산을 유효 활용하기 위한 제도·정책 등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중심시가지에서 빈 점포 등의 리노베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에서 우수한 노하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동시에 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빈집, 빈 점포 등의 활용을 포함하여, 관광 진흥과 건강·장수 등 지방에서 확대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한 사업에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새로운 지방 창생형의 부동산증권화 제도인 ‘소규모부동산 특정 공동사업’ 등의 활용을 추진하고 지방 창생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유동화·증권화에 관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부동산사업자, 금융기관 등에 배포한다. 빈집 등의 기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원활하게 전용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재생의 중심이자 지역의 얼굴인 상점가의 빈 점포 해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 점포 활용 등을 통해 상점가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책정하여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하나가 되어 추진 중인 상점가 활성화 시책에 대해 지방창생 추진교부금을 통해 중점 지원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 재생 콤팩트시티’(가칭), 상점가의 육아 환경 정비 등 관계 부처·청에 의한 종합적·중점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계획 달성을 위한 이·활용에 협력을 얻을 수 없는 빈집, 빈 점포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추진한다. 상점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후계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계지원센터’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유희자산과 개인 여유 시간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는 공유 경제는 ‘공유 경제 추진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지역에 ‘공유 경제 전도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유 경제 활용 추진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 경제 도입·연계를 지원한다. ‘돈벌이 역량’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적절한 KPI를 설정하고 PDCA사이클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KPI의 선택지 사례에 대해 RESAS의 개발 상황 등을 토대로 충실화를 도모한다.

## E. 마을 만들기에서의 관·민 연계 및 ‘시각화(visualization)’ 추진

### 【시책의 개요】

마을 만들기 추진 시 기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계,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 투·융자 실시 주체인 지역 관련 산·관·학·금·노·언·사의 폭넓은 합의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키워가는 마을 만들기’<sup>68</sup>를 추진한다. 또한 마을 비전의 공유와 합의 형성에 용이하도록 마을 만들기의 효과 등을 ‘시각화’ 하는 수법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의 환기를 더욱 촉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역플랫폼<sup>69</sup> 형성 수 : 2018년까지 47건(2017년 4월 1일 현재 31건)

## ● 주요 시책

### (4)-(가)-E-① 관·민 연계와 ‘시각화’ 추진

국내의 시책 사례<sup>70</sup>를 참고하면서 마을 만들기의 관·민 연계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마을 만들기의 효과 등을 ‘시각화’ 하는 정보기반(‘i-도시재생’)을 구축하여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후보지역 등에서 활용하고, 마을비전의 공유와 관계자 간 합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 및 크라우드 펀딩 활용을 추진하여 민간 투자의 환기를 촉진한다.

### (4)-(가)-E-②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추진(다른 시책과 중복)

(4)-(가)-E-① ‘관·민 연계 및 시각화 추진’ 과 연동하여 국내의 추진사례를 참고하면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기반 강화 및 전국적 확산을 도모한다. 2016년 6월에 ‘일본판 BID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추진 방책 검토회’가 BID를 포함하여 해외의 선진 사례와 국내의 추진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역할과 문제 등을 정리하여 중간 보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단체의 자원 확보를 비롯하여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추진 방책에 대해 필요한 법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에

<sup>68</sup> 일본의 도시·마을은 성숙기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만드는’ 마을 만들기에서 ‘키워가는’ 마을 만들기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만드는’ 마을 만들기 단계에서는 법률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개발, 공적 규제(Hard law)가 중심이 되지만, ‘키워가는’ 마을 만들기에서는 구역 내 관계자가 문제를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함으로써 관계자에 의한 자주적 규제, 지역 규칙 등 민간 발의의 소프트한 규제(Soft Law)가 필요함.

<sup>69</sup> ‘지역플랫폼’이란 지역의 PPP/PFI 사업 관계자 간 연계 강화, 인재 육성, 관·민 대화 등을 수행하는 산·관·학·금으로 구성된 협의의 장소로 콤팩트시티에 대한 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 만들기에도 활용됨.

<sup>70</sup> 일본의 추진 사례로는 후쿠오카 도시권에서 성장 전략의 수립에서 추진까지를 일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산·관·학·민의 연계조직(‘후쿠오카 지역전략 추진협의회’)이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음. 해당 협의회는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등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단체, 역내·외 기업, 금융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한 다음의 지원 시책을 실시한다.

1. 공공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마을 활력 창출을 위해 ‘공모 설치·관리제도’를 기반으로 민간자금 등에 의한 공원의 재생·활성화와 녹지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의 재원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한 광고물 게시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광고의 게시를 허가하는 등 규제를 탄력 적용한다. 경관을 배려한 광고 게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계획·지구계획 등 경관·도시 풍경과 관련된 규칙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여 광고에 의한 사업 수입 증가를 도모한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연계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과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의 책정을 촉구한다.
3.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면서 빈 점포, 오래된 민가 등 유흥자산의 리노베이션 등을 수행하는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쇄적 추진을 위해 민간도시개발추진기가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설립하는 펀드를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4.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단체의 보급·계발사업과 실증실험 등(‘도시편리성 증진협정’ 등에 근거한 광장 정비, 통로 포장의 고품질화 등)에 대해 지원한다.

## F.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시설의 매니지먼트 강화

### 【시책의 개요】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집중적으로 정비된 인프라가 앞으로 일제히 노후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면서 유지 관리·갱신 등과 관련된 총비용을 감축·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지 관리·갱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민간의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갱신이라는 문제는 순환형 사회의 관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현명한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공유 재산의 최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의 콤팩트화 등을 추진할 때는 ‘공공시설 등 총합 관리 계획’과 입지 적정화 계획에 근거하여 공공시설 등의 집약화와 활용을 도모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과 지역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 발상을 활용한 PPP/PFI<sup>71</sup> 등을 통해 효율화를 꾀한다. 가구 수 감소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유통 및 리모델링 시장은 침체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주택의 선택과 주택 자산의 시장 유통을 지원해 주택 교체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공적(公的) 부동산(PRE)<sup>72</sup>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는 PPP사업 규모(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 : 4조 엔(2015년까지 0.9조 엔)
- 기존주택 유통 시장규모(2025년까지) : 8조 엔(2013년 4조 엔)
- 리폼 시장규모(2025년까지) : 12조 엔(2013년 7조 엔)
- 임대·매각용 등 이외의 ‘기타 빈집’ 수(2025년까지) : 400만호 정도로 억제(2013년 318만호)

**● 주요 시책****(4)-(가)-(F)-① 공공시설 및 공적(公的) 부동산의 이·활용에 대한 민간활력 활용, 빈집 시책 추진**

필요한 인프라의 정비·유지·관리·갱신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위해 민간의 자금·노하우 활용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공적 부동산(PRE)의 유효 활용과 관련한 체제 정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PPP/PFI 추진 액션플랜(2017년 개정판)’(2017년 6월 9일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회의’ 결정)에 새롭게 ‘공적 부동산에 대한 관·민 연계 추진’이 명기된 바 있다. 지역의 가치와 주민 만족도 향상, 새로운 투자 및 비즈니스기회의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관·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시설 등 운영권 방식’(concession)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PPP/PFI 수법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체제의 구축·운용, 지역의 산·관·학·금이 연계하여 구체적인 안건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지역플랫폼 등을 통한 사업 발굴, 사업모델의 구체화·제시, 안건 형성에 대한 지원, 주식회사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형성 추진 등 PPP/PFI의 구체적 활용을 추진하고 공적 부동산 관련 증권화 수법 등의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용 지침서 등의 작성·보급과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 임대나 매각의 예정이 없는 장기 부재 빈집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와 위험성의 관점에서 제거가 요구되는 빈집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시구정촌에 의한 ‘빈집 등 시책 계획’의 책정, 빈집의 이·활용과 계획적 해체, 빈집 물건에 관한 원활한 유통·매칭을 촉진한다.

<sup>71</sup>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 관·민 연계. 공공적인 사회기반의 정비나 운영을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수법을 말함. PFI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약자. 공공시설 등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법을 말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함.

<sup>72</sup> Public Real Estate의 약자. PRE가 일본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함. 콤팩트시티 추진 등의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PRE의 유효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기존 주택의 유통이 구미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물리적인 주택스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에서의 활용과 주택 교체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품질 향상, 적정한 건물 평가의 시장 보급·정착, 건물상황조사(Inspection)와 하자 보험 활용, 새롭게 개시되는 ‘안심 R주택’ 제도<sup>73</sup> 등에 의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정비 등 기존 주택의 유통 촉진을 도모하여 2025년까지 기존 주택 유통 시장 규모를 8조 엔(2013년 4조 엔), 리폼시장 규모를 12조 엔(2013년 7조 엔)으로 한다. 크라우드 펀딩 등의 수법을 이용한 빈집 등의 유희부동산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창생형의 새로운 부동산 증권화 제도를 활용한 안건 형성을 지원한다.

#### (4)-(가)-F-② 인프라의 전략적 유지·관리·갱신 등 추진

필요한 인프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비용의 감축·평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관리 사이클의 구축과 장수명화(長壽命化)계획의 수립 촉진, 혁신적 기술의 창출 등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 등을 추진한다.

### (나)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

#### 【시책의 개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일체적인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취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도 지역주민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① 취락생활권의 장래상에 대한 지역주민 간 합의 형성 ②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체제 확립(‘지역운영조직’ 형성) ③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생활서비스의 유지·확보 ④지역 내 일자리·소득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활동·교류를 위한 거점 강화, 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약·확보, 취락생활권 내외와의 교통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편리한 지역 만들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생활과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 주체의 추진 체제 만들기(‘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원 회귀’를 촉진하고, 농협·상공회 등 지역 내외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sup>73</sup> 내진성(耐震性)이 있고 건물상황조사(Inspection) 등이 행하여진 주택으로서, 리폼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 국가의 관여하에서 사업자단체가 표장(‘안심 R주택’)을 부여하는 제도(2018년 4월부터 표장이 부여된 주택의 유통이 개시될 예정).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작은 거점’ (지역주민의 활동·교류 및 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약 장소) 형성 수 : 1,000개소를 목표로 함
- 주민의 활동조직(‘지역운영조직’) 형성 수 : 5,000개 단체를 목표로 함

**● 주요 시책****(4)-(나)-① 지역주민에 의한 취락생활권 장래상 합의 형성 및 활동 추진**

‘작은 거점’은 908개소(2017년 5월), ‘지역운영조직’은 3,071단체(2016년 10월 현재)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양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작은 거점’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침과 포털사이트 개설 등의 정보 제공,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 지방 창생추진교부금 등에 의한 지원을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작은 거점’과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을 목표로 다음의 시책들을 추진한다. 시책 추진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매년 적절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총합전략」의 대상 기간인 5년 이내에 향후 지역의 존재 방식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취락생활권 단위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지역 디자인’ (향후에도 그 취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스스로 행동하기 위한 스케치)을 책정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시정촌의 서포터와 퍼실리테이터 등 외부의 전문 인재와 지역 인재, 공민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향후 지역의 존재 방식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워크숍 실시를 추진한다. 이때 지역의 현상과 전망을 정리하는 ‘지역점검 카르테(Karte)’의 작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디자인’의 책정·실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하여 지원한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지역 만들기 참여에서부터 사업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각지에서 추진해 가기 위해 관계 부처·청이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활동의 보급·실천을 목표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포럼과 교류회 개최 등의 정보 교류 추진 및 도도부현 등에서의 의견 교환회 실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선구적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운영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을 촉진한다.

#### (4)-(나)-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영조직의 전개와 활동 추진

‘작은 거점’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디자인’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체의 상호 논의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서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역외 수입 확보 등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다기능형(多機能型)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지역운영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운영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노하우의 확립, 지역 내외로부터의 인재 확보·활용,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법인격의 취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행 사례의 체계적인 정리·제공과 효과의 ‘시각화’ 추진, 지방 창생추진교부금과 각 부처·청의 사업, 외부인재 도입(‘지역살리기 협력대’와 인재환류사업, ‘지방 창생 칼리지’ 등 활용)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추진체제의 구축에서부터 사업의 착수를 지원하고 지역운영조직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지역운영조직의 실태 파악 및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지역운영조직의 활동 심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운영조직의 운영 지원과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플랫폼 만들기를 추진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영조직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를 토대로 법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북의 활용을 추진하고 지연형(地緣型) 조직의 법인화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 (4)-(나)-㉕ 편리한 지역 생활을 위한 생활서비스 유지·확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서비스를 집약·확보하고 취약생활권 내외와의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운영조직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의 다기능화, 생활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생법」을 개정(2015 8월 시행)하여 복지·편의시설을 거점지역에 집약·확보하는 등 ‘작은 거점’ 형성을 추진하는 시정촌이 작성하는 ‘지역재생 토지이용계획’ 제도를 창설하고, 이들 시설의 입지 유도를 도모하기 위한 신고·권고제도와 유도시설의 정비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개발허가 등의 특례조치를 강구하였다. 지역재생계획을 활용한 ‘작은 거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책의 보급·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청 간 연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거점시설에서의 복지서비스 원스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생활서비스 유지·확보를 위해 「개호(介護)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에 근거하여 시정촌이 수행하는

지역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주민들의 쇼핑 등을 뒷받침하는 원활한 물류를 위해 각 운송회사 등이 연계한 새로운 공동 배송체계의 구축과 볼런터리체인(Voluntary Chain) 등과의 연계,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시스템 확립을 추진한다. 지역 내 사람·물자의 복합적·효율적 수송시스템 구축과, 자율주행 등의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2018년에 낙도·산간부에서 소형무인기를 활용한 하물 배송을 본격화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지역에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의 지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전원회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요인 분석, 지역의 이주자 유치 및 지원체제 정비(이주자 유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운영조직의 소개 및 ‘작은 거점’에서의 상담 창구 설치, 빈집 활용 등) 등을 위한 보급·계발을 도모한다.

**(4)-(나)-④ 지역 내 일자리·소득 확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진흥시키고 작더라도 지역에 적합한 자립적인 사업을 쌓아 나가으로써 지역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 복수의 사업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시책과 범분야적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인재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6차 산업화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관광자원과 ‘미치노에키(道の駅)’ 등을 활용한 도시와의 교류 산업화,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등 다기능형 사업 진흥, 창업·사업승계와 동시에 농협·상공회 등 지역 내외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와 필요한 인재의 지방 환류 및 외부 인재의 확보·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 운영과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해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한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조치 강화 및 활용 등을 통해 지역운영조직의 자금 조달력 향상을 도모한다.

**(4)-(나)-⑤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화, 소규모 학교 활성화, 휴교한 학교의 재개 지원**

공립 초·중학교의 설치자인 시정촌교육위원회가 학교 통합의 적부 또는 소규모 학교 존치를 위해 충실화 시책 등을 검토할 때, 기본 방향과 고려해야 할 요소, 유의점 등을 정리한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의 적정 규모·적정 배치 등에 관한 지침’을 2015년 1월에 책정하였다. 또한 휴교한 학교를 재개할 경우의 상담 창구 일원화를 위해 같은 해 3월에 문부과학성에 휴교 재개 지원 창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책을 토대로 ‘학교규모의 적정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학교 규모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시구정촌 가운데 58%는 이미 검토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역 커뮤니티의 핵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중

시하면서 활력 있는 학교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통합, 소규모 학교의 존속, 휴교한 학교 활용 및 재개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주지(周知)하는 동시에 우수한 선행 사례의 창출·보급 등 활력 있는 학교 만들기를 향한 시정촌의 주체적 검토와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 (다)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복지문제와 저출산 문제 대응

##### 【시책의 개요】

대도시권의 고령화가 향후 급격하게 진전될 전망이다. 특히 도쿄 근교의 고령자 수 증대가 현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와 독신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에서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문제이다. 재택의료료를 포함한 의료·복지 제공체제의 정비를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중교통기관 등의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여 대도시권에서도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 내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집약화·재건축과 병행하여 고령자 지역포괄케어의 거점 형성을 촉진하고,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활기차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스마트웰니스 주택·시티’의 전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쿄권의 저출산율에는 노동시간 문제 등 청년 세대의 ‘일하는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도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권에서 ‘지역 어프로치’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쿄권의 기업들은 장기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와 육아하기 쉬운 직장 환경 만들기를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대도시권의 고령자 급증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광역 연계를 염두에 둔 의료계획 및 ‘개호(介護)보험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실시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UR’ 이라 함) 주택단지의 지역 의료·복지거점화(대도시권에 있는 1,000호 이상 UR단지 약 200단지 가운데 2020년까지는 100단지 정도, 2025년까지는 150단지 정도를 거점화)
-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단지(100호 이상)에서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육아가구의 지원을 위한 시설 병설률 : 2016년~2025년 기간 중에 재건축이 수행되는 단지의 약 90%(2016년 84.4%)

#### ● 주요 시책

##### (4)-(다)-①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복지문제에 대한 대응

앞으로 대도시권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의료·복지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된다. 대도시권은 교통망이 발달하여 환자·주민의 이동가능 범위가 넓은 점, 환자·주민이 좁

은 범위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수요 추계 및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도부현이 환자의 유·출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의료수요의 장래 추계를 포함하는 ‘지역의료구상’에 근거하여 2018년도부터의 의료계획 및 개호보험사업 지원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쿄권의 지역 의료·복지 제공체제 정비와 고령자의 주거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쿄권과 국가가 연계하여, 광역적인 관점에서 지역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간호 인재를 확보·정착을 위한 시책 등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복지 제공체제의 정비, 빈집 활용 및 공공 임대주택단지의 재생·복지거점화, 소위 뉴타운의 재생 및 주택 교체 지원(리버스 모기지<sup>74</sup>, 기존 주택·리폼 시장 활성화 등) 등을 도쿄권과 국가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또한 도쿄 거주자 중 50대 남성의 반수 이상, 50대 여성 및 60대 남녀의 약 3할이 지방 이주를 예정 또는 검토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의 지방 이주 선택지(選択肢)를 지원해 나간다.

#### (4)-(다)-② 대도시 근교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생·복지거점화

대도시 근교의 주택 단지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인구가 집중된 장소로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자가구의 증가와 독신화 진행, 육아가구 등 청년 정착 촉진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시설 활용과 재건축 시의 복지시설 병설을 통해 단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고령자 지역포괄케어의 거점 형성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거주기능의 집약화 등과 병행하여 육아지원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재편을 추진해 나간다.

이들 시책을 통해 고령자와 육아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활기차게 생활·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웰니스 주택·시티’의 전개를 추진하고, UR단지에서 2020년까지는 100개 단지 정도, 2025년까지는 150개 단지 정도를 의료·복지거점화하고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공공 임대주택단지(100호 이상)의 고령자가구·장애인가구·육아가구 지원시설 병설률 목표를 2016년~2025년 기간 중 재건축 진행 단지의 약 90%(2016년 84.4%)로 설정한다.

<sup>74</sup> 내집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의 하나. 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적은 고령자가구가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임. 공적인 상품과 민간의 상품, 연금방식과 일괄방식이 있음.

#### (4)-(다)-③ 도요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평균 초혼 연령과 제1자녀 출산 연령이 전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높으며, 특히 제3자녀 이후 출생 수가 전국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도요권을 비롯하여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입각한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지역 어프로치’의 시책을 추진한다. 도요권 산부인과 시설에 대한 도현 경계를 넘는 이송 조정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해 도요권과 국가가 연계하여 대처해 나간다.

#### (라) 주민이 지역 방재의 담당 주체가 되는 환경 확보

##### [시책의 개요]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진·폭설·풍수해 등의 다양한 재해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대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소방단과 자주방재조직 등의 강화, 재해대응·방재에서의 ICT 이·활용 추진 등에 의하여 주민이 지역방재의 담당 주체가 되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소방단 단원 수의 유지(2016년 4월 현재 856,278명, 2017년 4월 현재(속보치) 850,418명)
- 전 도도부현에 L Alert 도입(2017년 11월 현재 45개 도도부현)(다른 시책과 중복되는 지표)

#### ● 주요 시책

##### (4)-(라)-① 소방단 등의 강화 및 ICT 이·활용에 따른 주민 주체의 지역 방재 충실화

소방단에 대해 단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이나 학생 등의 입단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단원을 확보·증원하는 동시에 자주방재조직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소방단원 가입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 및 청년들의 가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G공간 정보’(지리공간정보)의 이·활용, L Alert의 보급 전개 가속화,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제공되는 정보의 확충 및 이·활용 촉진 등을 위한 시책들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상세한 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

#### (마) 고향 만들기 추진

##### [시책의 개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고향’들이 존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고향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고향을 사랑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인식시킴으로써 태어난

사람은 고향에 머물고, 도시로 나온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한다. 또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곳이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대한 애착과 귀속 의식을 높이는 ‘고향 만들기’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시책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체인 지방 창생의 추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고향 만들기 추진 조직 수를 1만 단체로 증가(2013년 3,291개 단체)

● **주요 시책**

(4)-(마)-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시책 추진

‘고향 만들기 전문가회의’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고향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이념과 시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고향 만들기의 의의와 고향 만들기 관련 시책을 정리하였다. 그 성과를 ‘고향 만들기 추진조직’(이하 ‘추진조직’이라 함)에 주지·홍보하는 동시에 고향학의 추진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고향 만들기 실천활동팀’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추진조직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고향 만들기 활동의 진전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활동모델을 알리고 공유하여 전국 각 지역에 파급시키는 ‘고향 만들기 실천활동’을 실시한다. 2017년 7월까지 4개 지역에서 실천한 활동을 ‘고향 만들기 실천활동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홍보한다.

(바) 건강수명을 늘려서 평생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시책의 개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고령자가구의 증가와 독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 개인에 의한 질병·복지 예방과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생애현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지역자원과 관계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면서 보다 많은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하도록 추진한다.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2010년 대비 1세 이상 연장(2025년까지는 건강수명을 2세 이상 연장)

## ● 주요 시책

### (4)-(바)-① 질병 예방과 건강 만들기 추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인생 90년’이라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가운데 중증화(重症化) 예방과 건강 만들기 시책을 통해 주민의 건강·장수를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건강·장수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의료기관, 개호(介護)사업자 등과의 연계를 비롯하여 지역 전체가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시책이 되며, 사업으로서 자립하여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관광, 교육·복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생애현역사회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강화, 활력 창출과 같은 효과도 기대되며 지방 창생의 심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자원과 관계 시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질병·복지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의 실례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에서의 추진을 도모한다.

지역 상점가 등의 협력을 얻어 주민의 예방·건강증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가를 촉진하는 사례, 쾌적한 보행공간의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의 외출 기회를 늘리는 사례(스마트웰니스 시티 시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추진을 촉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헬스케어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관 차세대 헬스케어산업 협의회’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선구적인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 창생 추진교부금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 사례를 제시한다.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스포츠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한다.

### (4)-(바)-② 지역공생사회 실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대 구조가 변화하고 지역사회의 허리부분이 취약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보장과 마을 만들기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빈집 등의 지역자원과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에 순환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지역·생활을 함께 만들고 삶의 보람을 서로 높일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한다. 도와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이 역할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나답게 활약할 수 있는 지역 커뮤

니티를 육성하고, 복지 등의 지역 공공서비스와 협동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민간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 보장의 프레임을 벗어난 지역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4)-(바)-③ 지역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2016년 10월 1일 현재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는 3,459만 1천 명,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7.3%이다. 2017년의 장래추계인구(중위(中位) 가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42년에 3,935만 1천 명으로 피크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 후에도 75세 이상 인구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도시지역과 지방도시 등 지역 간에 고령화 진전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카이(団塊)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대응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료·복지·예방·주거·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가 자기다운 생활을 인생의 최후까지 계속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 (4)-(바)-④ 데이터 헬스와 건강 경영의 일체적 추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의 질(QOL)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QOL) 향상과 건강 경영 등의 시책을 통한 기업 활성화는 지방 창생의 본격적 확산으로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와 질병·복지 예방, 자립 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건강·의료·개호(介護)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가 종업원의 건강 관리를 경영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강 경영’의 지역기업 침투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조합 등에 의한 데이터 헬스<sup>75</sup>와 사업주에 의한 건강 경영 간 연계(콜라보 헬스)를 도모함으로써 가입자·종업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과적·효율적 실시를 촉진한다. 예방·건강 만들기 등을 향한 가입자의 행동 변용을 촉구하는 보험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sup>75</sup> 의료보험자가 진료비 영수증, 특정 건강진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PDCA사이클에 따라서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입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

## (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지역 만들기

### 【시책의 개요】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등과 관련된 미래 국제사회의 모습이 세계에서 공유되었다.<sup>76</sup> 동 협정의 채택을 토대로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지구 온난화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7호)의 개정과 ‘지구 온난화시책 계획’ (2016년 5월 13일 각의 결정)<sup>77</sup>의 수립 등이 이루어졌다.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개발과 사회실증,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의 변혁을 위한 시책 등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 진전시키는 것은 에너지 비용 관련 수지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 향상, 새로운 고용 창출 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콤팩트화는 지구 온난화 시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시책을 지방 창생의 관점에서 받아들여 에너지 절약화,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도시 콤팩트화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지구 온난화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의 수립·실시
- (4)-(가)-C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의 정책 간 연계 추진’에 관한 KPI와 같음

## ● 주요 시책

### (4)-(사)-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지역 만들기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최대한 도입 확대와 활용, 에너지 절약,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저탄소형 도시·지역 만들기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 책정·실시 매뉴얼’을 개정함으로써 계획 책정을 지원한다. 2016년의 「지구 온난화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하여 ‘도시 기능의 집약 촉진’ 등이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의 기재사항의 하나로 명기되었고 ‘지구 온난화시책 계획’에서도 저탄소형 도시·지역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의 콤팩트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지구 온난화 시책과 ‘도시의 콤팩트화’ 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의 보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자와 육아 세대(世代)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

<sup>76</sup> 파리협정에는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세계 전체의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할 것, 1.5°C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할 것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의 밸런스를 금세기 후반에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과학에 따라서 조기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음.

<sup>77</sup> 「지구 온난화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형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의 콤팩트화 등을 추진한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시책의 개요]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세계 전체의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합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목표의 추구는 일본 각 지방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공헌하며 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미래도시’ 구상에서는 일찍부터 환경·사회·경제의 세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해 왔다. 이러한 생각은 SDGs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SDGs의 달성을 위한 시책의 선행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SDGs의 국내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추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에서 활약하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SDGs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SDGs의 실시 단계에서도 세계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실사와 국제 협력의 양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환경미래도시 및 환경모델도시의 선진적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 창생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환경미래도시’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새롭게 SDGs의 수법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본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시책을 세계에 알려 나가도록 한다.

##### [주요 핵심성과지표(KPI)]

- 도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비율 : 30% (2017년 10월 13일 현재의 시책 추진 비율은 1%)

#### ● 주요 시책

##### (4)-(아)-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급 촉진 활동 전개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 관련 시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당사자에 등을 대상으로 SDGs에 대한 이해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래도시’ 구상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 경영의 노하우와 인재의 교류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그 성과를 상호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정비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관련 시책의 추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는 국내외 도시·지역이 한 자리

에 모여서 지식 교류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국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계발을 시행한다.

#### (4)-(가)-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SDGs 모델 사례 형성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 관련 시책을 공모하여 우수한 시책을 제안하는 도시·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SDGs의 이념에 따른 통합적 시책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잠재력이 높은 선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모델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전문가의 지원하에 모델 사업의 시책별 달성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도시·지역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한다.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 관련 시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사업을 수행하는 도시·지역에 대해 SDGs의 이해 촉진 및 보급·계발을 위한 사업 전개를 촉구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 관련 시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청에 의한 ‘지자체 SDGs 추진 관계부처·청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여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 선정의 기준 작성에 대한 참여’, ‘응모안건의 서면평가, 공청회 참여’, ‘계획 수립 시에 관계부처·청의 지원 시책 활용 등 조언’ 등의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 N

##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 1. 정보 지원의 화살

#### (1)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개발, DMO에 대한 정보 지원

지방 창생을 위한 정보지원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관·민의 빅데이터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을 2015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제공 개시 이후 데이터 추가 이외에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수(改修)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6월에는 이용 가능한 브라우저의 추가 대응이 완료되었고 10월에는 지도 기능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RESAS의 기능과 데이터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포함하여 편리성을 향상시켜 나간다.

DMO가 KPI의 달성상황을 관리하고 PDCA사이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광 지역의 매니지먼트 마케팅 수행을 위한 지원 툴인 'DMO 넷'을 2017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전국 각지의 DMO에서 'DMO 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매니지먼트 마케팅이 더욱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와 동시에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지역 산업·고용 창조차트', 법인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법인 인포메이션' (2017년 1월부터 운용 개시, 각종 행정기관의 데이터 제공 사이트와도 연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 등의 데이터 수집비용 저감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도모한다.

## (2) RESAS의 보급 촉진

RESAS 제공이 개시된 이후 경제산업국과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RESAS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재를 배치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RESAS를 활용한 정책 입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 도도부현에 RESAS 담당과를 설치하는 등 RESAS의 보급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RESAS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관 총합전략’ 책정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구체적 시책 검토 시에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의 수업에 RESAS 이용, 지방자치단체·NPO 등이 주최하는 RESAS 활용 세미나와 콘테스트 실시 등 RESAS를 활용하는 움직임은 각 지역에서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RESAS의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 2. 인재 지원의 화살

### (1) 지방 창생 리더 육성·보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관 총합전략’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은 실제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재(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비롯한 지방 창생인재)의 확보·육성·활약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 작성된 ‘지방 창생 인재플랜’에서는 지방 창생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민간사업자 등 양성기관의 네트워크 만들기를 지원하고, 지방 창생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 창생에 뜻을 둔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소재·코스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전문인재의 양성·연수의 충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을 토대로 2016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 창생 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회의’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2016년 12월에 ‘지방 창생 칼리지’를 개강하였다. ‘지방 창생 칼리지’에서는 복수의 양성기관이 작성한 학습콘텐츠를 전국 각지의 폭넓은 연령층·직종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e러닝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개강 후 2~3년 내에 수강자 10,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강 이후 약 1년(2017년 11월)만에 목표에 도달). 또한 2017년 3월부터는 양성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창생 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웹사이트(지방 창생

‘연계·교류 광장’)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지방 창생 칼리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수강자의 의견, 향후의 시책 전개 등을 토대로 학습콘텐츠의 충실화를 도모하면서 수강자를 확대하고, 5년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500명 이상의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창생 연계·교류 광장’의 보급·축진을 통해 지방 창생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정보 제공의 강화 및 분위기 양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챌린지 기회를 창출하고 리커런트 교육장소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한다.

##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2015년 2월에 ‘지방 창생 컨시어지’ 제도를 구축하였다. ‘지방관 종합전략’의 수립을 포함하여 지방 창생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담창구로서 해당 지역에 애착을 가진 국가의 직원을 컨시어지로 선임하고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지방 창생 컨시어지 간의 연계와 정보 공유 및 현장의 수요 파악을 위해 각 도도부현별로 지방 창생 컨시어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및 지방 창생 컨시어지 간 의견 교환회를 지방을 포함하여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6월에 지방 창생 컨시어지 활용상황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 창생 컨시어지에 관한 활용 지침 및 상담 사례를 2015년 7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담당 부처·청이 명확할 경우 해당 부처의 지방 창생 컨시어지에게 상담함으로써 필요한 지식·견해 등을 관할 부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담당 부처·청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내각부 지방 창생추진실의 지방 창생 컨시어지에게 상담함으로써 필요에 대응하여 관계 부처·청의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방으로부터의 상담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친절, 정중, 성실하게 대응해 나간다.

##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2015년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를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3년간 지방 창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73개 시정촌에 대해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및 대학 연구자, 민간인재를 파견하고 있다. 파견된 인재는 시정촌장의 보좌역으로서 부시정촌장이나 지

방 창생 담당부서의 간부 등으로 임명되어, 각 시정촌의 '지방관 총합전략'에 기재된 시책의 추진을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자가 모두 모이는 정보 교환회·보고회가 1년에 4회 정도 개최되므로 파견자가 시정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그 노하우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지방 창생 담당 정무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창생에 적극적인 시정촌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재 파견을 시행한다. 보고회의 개최, 지방 창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파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한 지방 창생 추진사례와 노하우의 축적을 도모하여 파견자 및 시정촌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파견자 및 파견대상 시정촌이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역시 충실하게 한다.

### 3. 재정 지원의 화살

#### (1)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법정 교부금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칸막이' 사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년도 시책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주적·주체적 사업 설계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PDCA 사이클의 확립하에서 관·민 협동, 지역 간 연계, 정책 간 연계 등을 촉진하고 선구적이고 우수한 사례의 전국적 전개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의 선정·검증은 관계 부처·청의 참여를 얻어 내각부에서 대응한다.

2018년도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운용은 2017년에 이어 하드 사업 관련 요건 완화 및 교부금 상한액 인상 등을 수행하여,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된 '지방창생거점정비 교부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 총합전략」에 근거한 자주적·주체적인 지역 거점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지방의 사정을 존중하면서 생산성 혁명에 도움이 되는 시설 정비 등의 시책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 1,000억 엔, 사업 규모로 2,000억 엔 정도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창설하고, 안정적·계속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해당 교부금을 2016년 4월에 시행된 개정 「지역재생법」에서 법정 교부금으로 규정하였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관·민 협동, 지역 간 연계, 정책 간 연계 등을 수행하는 선구적인 지자체 시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KPI의 설정,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효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고 국가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가는 성과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책 내용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등 PDCA 사이클을 토대로 시책의 개선을 촉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역 기술의 국제화(로컬 이노베이션),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로컬 브랜딩, DMO, 지역상사, 地域商社), 지역 일자리의 고도화(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지방 창생 추진 인재의 육성·확보, 이주 촉진과 생애활약마을, 지역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작은 거점’ 형성, 도시의 콤팩트화와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KPI 설정 및 사업의 효과 검증 방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특징적인 시책 사례집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 수행한다.

2018년도에도 2016~2017년도에 이어 지방창생추진교부금 1,000억 엔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과 관련된 사무 부담의 경감, 하드웨어 사업 관련 요건 완화, 교부 상한액 인상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아울러 높은 경제 효과가 전망되는 선구적인 시책,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시책, 지역에 존재하는 유향 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등에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창생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한다. 2017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지방관 총합전략」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주적·주체적 지역 거점 만들기 사업에 대해,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도적인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생산성 혁명에 기여하는 지방창생거점정비 교부금’(국비: 600억 엔)이 계상되어, 본격적인 사업 전개 단계를 맞이한 지방 창생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관 총합전략」에 제시된 사업의 거점으로,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 창생 파급 효과가 높은 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제조업이 수행하는 저비용·고정도(高精度)의 연구 개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지는 연구 개발을 위한 거점, 지역의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수 거점, 지역의 식육 가공업자·수산 가공업자 등을 집약화·대규모화하는 가공 처리 시설, 드론·자율주행·AI 등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 거점

등이다. 지방 창생의 정책 5원칙에 입각하여 교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채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전략과 사업 계획에 근거한 이·활용 방책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KPI 설정 및 PDCA 사이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방 창생은 지역적·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향후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적이면서 우수한 사례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틀라이트 오피스도 활용하면서<sup>78</sup>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개별 상담에 수시로 대응하는 등 세심한 상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 (2) 지방재정 조치

지방 창생을 위해 우선은 국가와 지방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의 요인과 문제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지방의 책임과 창의에 의한 시책 강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주체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치를 강구한다.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사업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자주적·주체적으로 지방 창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사업비’ (1조 엔)를 계상하고 있다. 계속하여 2018년에도 1조 엔을 계상한다.

## (3) 세제

개인과 기업의 ‘민간의 힘’을 지방 창생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제의 추진을 도모한다.

### 지방 창생 응원 세제(기업판 고향납세)(조치 완료)

‘지방관 총합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 창생에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우대하는 조치를 2016년에 창설하였다. 2017년 12월 현재 387개 사업이 인정(認定)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청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 대상 홍보 활동과 경

<sup>78</sup> 2017년 6월에는 고치현 및 아오모리현에서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시행을 실시하였고, 각 현에서 시정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부금 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도 개최하였음.

제 3단체를 비롯한 경제계에 주지(周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제도 활용 및 지방 창생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가를 촉진한다.

#### **지방거점 강화 세제 확충[조치 완료]**

본사 기능의 이전 또는 지방에서의 확충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조치 운용을 2015년 8월에 개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고용촉진세제와 소득확대 촉진세제의 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7년부터 오피스 감세 및 고용촉진세제 확충, 이전형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에 의한 감수보전(減収補填)조치를 확충하였다. 2018년부터는 종업원 증가 수 등의 고용 요건 완화 및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지역 재검토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를 더욱 추진한다.

#### **지역미래투자 촉진 세제 창설[조치 완료]**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경제전인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조치를 2017년에 창설하였다.

#### **지역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조치 ('작은 거점' 세제) 확충[조치 완료]**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조치를 2016년에 창설하였다. 앞으로도 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회사 설립 시의 출자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를 충실화하여 '작은 거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 **특정 지역에서 상업 및 주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점포 겸용 주택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 해제 조치 창설**

빈 점포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책정하여 일정 구역 내에서 지역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상점가 활성화 시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계획 달성을 위한 이·활용에 협력을 얻을 수 없는 빈집 겸 빈 점포 등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 확충[조치 완료]**

####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 연장 등[조치 완료]**

## 4.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 등과의 연계

### (1) 국가전략특구제도 등과의 연계

국가전략특구는 대담한 규제 개혁을 통해 국가의 제도를 변화시키기까지 ‘전국에서 단 하나의 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지방 창생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말까지의 2년간을 ‘집중개혁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점 6분야<sup>79</sup>를 비롯하여 잔존 암반(岩盤)규제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구 내 규제개혁의 경제효과가 높고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부터 해당 규제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제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재 유치 촉진’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6개 분야·사항을 중심으로 통달(通達)·고시 등에 대한 종합적·범부처적 재검토를 포함하여 잔존 ‘암반(岩盤)규제’의 개혁을 추진한다. 지방 발(發) 전국 최초의 이노베이션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소형무인기 기타 근미래기술(近未来技術)과 4차 산업혁명의 실현과 관련된 실증·실험을, 특구 내에 ‘지역한정형 샌드박스’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사후 체크를 강화하면서 사전 규제 합리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 실현을 위한 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와 ‘국가전략특구 워킹그룹’에서 계속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개정 국가전략특구법안의 차기 정기국회 제출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국가전략특구와 지방 창생추진교부금 등과의 연계

국가전략특구에서 규제개혁을 대담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열의가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선구적이면서 경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창생추진 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창생의 심화로 이어지게 한다.

<sup>79</sup> ‘일본재흥전략 2016 개정판’ (1998년 6월 2일 각의 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①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재’ 유치 촉진, ② ‘공공시설 등 운영권 방식’ (Concession) 활용 등을 통한 ‘인바운드’ 추진, ③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추진, ④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사업주체 간 ‘동등 지위’ (Equal Footing) 실현, ⑤특히 글로벌 신규기업 등에서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 추진, ⑥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제1차 산업’과 ‘관광’ 분야 등 개혁.

## (2) 규제 개혁과의 연계

지역경제의 활성화,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강화를 위해 지역·민간의 창의적 발상을 활용하는 동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타파해 나간다. 규제개혁추진회의와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이·활용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테마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 민박 서비스에 대한 대응

주택숙박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근거하여 2018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 부처·청과 도도부현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도모하고, 적절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건전한 민박 서비스의 보급을 도모한다.

###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규제 개혁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므로 민박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혁 이외에 2017년 12월에 성립된 개정 여관업법 등에 따라 호텔·여관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지방판 규제 개혁 회의’ 설치

지역의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 건설하고 지속적인 추진체제 정비가 불가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판 규제개혁회의’ 설치를 지원한다.

## (3)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의 연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112호 이하 ‘사회보장 개혁프로그램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수익과 부담 간 균형이 갖추어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 시책·의료제도·개호(介護)보험제도 등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건강 만들기와 복지 예방 시책을 포함하여 지방의 의료·복지제도 개혁을 지원한다. 도도부현이 수립하는 ‘지역의료구상’을 토대로 ‘새로운 공립병원 개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공립병원 개혁을 추진한다.

### 어린이·육아지원 신(新)제도의 원활한 시행

유아교육과 보육, 지역 어린이·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육아지원 신(新)제도’는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

2017' (2017년 6월 9일 각의 결정)에는 사회보장의 세대 간 공평 확보를 목표로 전세대형 사회보장의 실현을 추진할 것,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의 활용 등을 도모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기아동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등을 토대로 '육아 안심 플랜'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시책을 추진할 것, 어린이·육아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분 이외도 포함하여 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하여 나갈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방침하에서 어린이·육아지원의 충실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 의료보험제도 개혁

'사회보장개혁 프로그램법'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5년 법률 제31호)이 2015년 5월에 성립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원활하게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확충과 동시에 도도부현이 재정 운영의 책임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여 나간다.

### 지역의료구상 수립

지역 의료 수요의 장래추계 및 '병상기능 보고제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료구상을 수립함으로써 환자의 입장에 서서, 어느 지역의 환자라도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의료수요의 장래전망을 토대로 공립병원과 공적(公的) 병원을 포함하여 복수 병원 간 병원 통합을 추진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의료·복지 제공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의료수요의 내용에 대응하여 병상기능을 분화해 나간다. 동일한 의료기능의 병원이 복수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제공체제의 재편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제공의 중심인 고도의료 담당 병원과 급성기(Acute Phase) 담당 병원, 주변지역에 뿌리를 두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간에 역할 분담을 하는 등의 대응을 촉진한다.

### 공립병원 개혁

향후의 지역의료구상을 토대로 공립병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영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제공체제의 확보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도부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공립병원과 공적(公的) 병원, 민간병원 간 재편도 포함하여

공립병원의 재편·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현장이 가질 수 있도록 공립병원의 지방독립행정법인화와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활용을 도모한다.

### 지역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대도시 지역과 지방도시 등에서 고령화의 진전 상황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카이(団塊)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대응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료·복지·예방·주거·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을 구축한다.

### 가족·지역사회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구조 개혁

지방에서 의료·복지 인재(人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재적 유자격자를 포함한 인재의 수급 추계 등 향후 전망을 명확하게 한 후에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체제의 구축, 의료·복지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육아·복지 분야 인재의 유동성 향상, 직장환경 개선을 통한 매력적인 노동 환경 창출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하에서의 지역 의료·복지 제공체제 확립을 위해 큰 분수령인 2018년도를 목표로 하는 시책과 합쳐서, 필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4)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은 지역이 스스로의 발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지방 창생에서 극히 중요한 테마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제안모집에 대해 지방의 제안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본자세에 입각하여, 제안의 최대한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의 보급과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권한의 이양 및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2017년 지방 제안 등에 관한 대응방침'을 2017년 중에 각의 결정한다. 작년을 상회하는 311건의 제안에 대해 최대한의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청과 조정을 수행한 결과 지역자원의 이·활용 등을 통한 지방 창생과 어린이·육아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안 등 제안의 약 90%에 대해 실현·대응할 전망이다. 그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괄 법안 등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함을 기본으로 한다. 현행 규정으로 대응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지방분권개혁 전문가회의'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한다. 계속하여 조사 수행 등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하면서 내각부에서 적절하게 점검을 수행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방분권개혁 전문가회의’에 보고한다. 심포지엄 개최, 지방분권개혁 사례집 보급, SNS 활용 등 개혁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방분권개혁·제안모집방식 핸드북’의 보급, 지방자치단체 대상 연수의 충실화, 지방의 개혁 담당 주체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의 보급, 제안 모집 방식의 활용 강화 등 지방에서의 개혁 시책을 촉진한다.

## 마지막으로

옛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저서 「Self-Help(자조론, 自助論)」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나카무라가 귀국 후에 이를 번역하여 「서국입지편(西国立志編)」으로 출판했는데, 수신(修身) 교과서부터 메이지천황의 어전강의 교과서까지, 국민적 읽을거리로 1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sup>80</sup>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감소·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방 창생을 성취함으로써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는 ‘문제 선진국’인 일본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어느 시대든 일본을 변화시켜 온 것은 ‘지방’이다. 지방 창생에 있어서도 ‘자조의 정신’ 하에서 지방이 스스로 생각하여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한 ‘지방 인구 비전’과 ‘지방관 총합전략’의 목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자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국가도 이러한 지방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일률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메뉴를 마련하여, 지방 스스로에 의한 재량성과 책임 있는 지방 주도의 정책 만들기를 전력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일본에는 일자리 만들기, 이주, 육아, 마을 만들기 등 각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 또한 도호쿠(東北)의 재해 피해지역에서는 ‘민

<sup>80</sup> S. Smiles,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가나야 슌이치로(金谷俊一郎). 2013. 現代語訳西国立志編 スマイルズの『自助論』. PHP新書.

(民)’의 노하우와 새로운 발상을 활용하고, 현지의 행정·주민·기업 등이 연계하여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새로운 도호쿠’의 창조). 국가의 시책은 일률적인 정책을 전국에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창의적 발상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출산율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상위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아마미군도(奄美群島)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 있는 진흥을 배려하면서 지방 창생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으로서 오키나와진흥책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종합적·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토강인화(国土強靱化) 등 안전·안심에 관한 시책을 지방 창생 시책과 조화되게 추진하여 나간다.

인구 감소·초고령화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킨다. 향후 국가와 지방이 국민과 함께 기본 인식을 공유하면서, 총력을 다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향하여 반드시 미래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에서의 대폭적인 청년 감소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미래를 향한 일본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 창생은 일본의 창생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이다. 새로운 국가 형태 만들기를 추진하여 이 나라를 자손, 나아가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도 일본의 좋은 점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총합전략」은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방 창생을 성취하기 위해 일본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총합전략」으로서, 그 진척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펴낸곳 국토연구원  
기 획 제5차국토종합계획 연구단  
번 역 김재호  
감 수 이동우  
편 집 유지은(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발 행 2019년 7월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960-4760  
가 격 비매품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http://www.cntp.kr>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출판등록 제2017-9호  
ISBN 979-11-5898-449-6

- 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  
(平成27年8月14日閣議決定、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総合計画課)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헤이세이 27년 8월 14일 각의 결정,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종합계획과)
  -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17改訂版)  
(平成29年12月22日 閣議決定、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2017 개정판)  
(헤이세이 29년 12월 22일 각의 결정,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8  
(平成30年6月15日 閣議決定、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18  
(헤이세이 30년 6월 15일 각의 결정,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 이 책은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위 3개의 문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음.

※ 이 책의 내용은 번역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



#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국들의 정책 경험과 계획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 이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 출간하는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2015),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2017 개정판),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2018)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들 계획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위기,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등 일본이 겪어 온 도전에 대응하는 일본의 국토 발전 전략입니다.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고령화 등은 우리가 경험한 듯한 기시감(既視感)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번역서가 계획이나 미래 국토전략 전문가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비매품/무료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 (반곡동)  
Tel. 044-960-0114 Fax. 044-211-4760

9 791158 984496 93300  
ISBN 979-11-5898-449-6